



무역장벽 보고서

미국 EU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터키 러시아 호주

1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발간사

정부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대내 경제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6월 ‘신통상 로드맵’을 수립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및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교부와의 협업을 통해 주요국가의 통상환경을 정리한 “2013 외국의 통상환경”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1998년부터 정부가 발간한 자료를 확대 개편하여, “지역별 통상환경(4권)과” 분야별 통상환경(1권) 그리고 “무역장벽 보고서(1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통상환경”에는 총 83개국의 경제동향, 우리와의 무역관계, 각종제도 등에 관한 자료를 △아시아·대양주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중동의 4개 지역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분야별 통상환경”에는 관세, 수입규제, 통관절차, 세이프가드 등 15개 분야별 통상환경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조사보고서인 “무역장벽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해외 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기업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국제통상 분야에 관
심이 있는 분들께는 귀중한 학습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에 책자 발간을 위해 힘써 주신 외교부 및 재외공관,
무역협회, KOTRA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
사의 마음 전합니다.

2013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 상 직

목차

1. 무역장벽 보고서 ●
2. 분야별 통상환경
3. 아시아·대양주
4. 아메리카
5. 유럽
6. 아프리카·중동

미국	2
EU	6
일본	12
중국	19
인도네시아	41
베트남	50
말레이시아	57
인도	61
터키	68
러시아	72
호주	74

무역장벽 보고서

미국 EU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터키 러시아 호주

1

미국

미국은 2003년까지 우리나라의 최대 상품 교역국이었으나, 2004년부터 중국이 최대 교역국으로 올라서면서 제2대~제4대 교역국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제3대 교역국으로 우리나라 상품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이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국 상품수출입은 각각 585억 달러, 433억 달러로 전체 상품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0.7%, 9.5%이며, 무역수지는 15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은 기계류(45.5%), 전자전기(25.4%), 철강금속 제품(8.5%)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기계류(26.9%), 전자전기(21.5%), 화학공업제품(18.8%), 농림수산물(14.4%)이다.

1962~2013.9월 누적액(신고금액) 기준,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은 총 525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IFDI 유치액에서 24.5%를 차지한다.¹ 미국의 대한국 주요 투자 업종은 금융보험(15.2%), 유통(14.7%), 전기전자(11.0%), 부동산·임대(9.9%), 전기·가스·수도(7.8%), 문화·오락(7.3%) 등으로 서비스업의 투자 비중이 59.4%를 차지한다. 한편 1968~2013.9월 누적액(신고금액)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국 투자는 684억 달러로 우리나라 최대의 OFDI 대상국(우리나라 전체 OFDI 금액에서 19.4%를 차지)이다. 우리나라의 대미국 주요 투자업종은 광업(24.8%), 유통(19.6%), 금융·보험(14.2%), 전기·전자(7.9%) 등이다.

한·미 FTA는 2007.4월 타결된 후 2010.12월 추가 협상이 타결되었고, 2012.3.15일부터 발효되었다.

1_ 2013년 현재(누적액 기준) 미국은 EU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이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화장품

미국은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어 별도의 자료 없이 사용 가능한 자외선 차단효과 성분의 수를 여타 국가에 비해 현저히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이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자외선 차단 성분을 미국은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눈가용 화장품에 사용가능한 타르계 색소의 범위 역시 한국 29종, 일본 58종, 유럽 52종에 비해 미국은 4종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분쟁광물 규제

미국은 DR콩고 등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광물의 판매자금이 반군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쟁광물에 대한 소비자 의식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을 2010.7월에 제정하였다. 이 법은 2014. 5.31일 연간보고서 제출 시부터 적용되며,² 이로 인해 미국 상장기업은 분쟁 지역에서 생산되는 4대 광종(3TG: 주석(Tin), 탄탈륨(Tantalum), 텅스텐(Tungsten), 금(Gold))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는지의 여부 및 증빙서류를 매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해야 한다.

동 분쟁광물규제에 의한 관리·보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미국 상장기업에 적용되나, 이러한 기업에 납품하는 관련 국내 협력업체들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충전기 및 외부전원공급장치(EPS) 시험기준 개정

2012.4월 미국은 에너지관리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에 따라 충전기 및 외부전원공급장치(External Power Supplies)에 대한 에너지

2. 분쟁지역에서 채굴된 광물의 사용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첫 2년간 감사유예를 적용하며, 시가총액이 75만 달러 이하인 기업 혹은 매출총액이 5천만 달러 이하인 기업은 4년간 유예를 적용한다.

지 효율 규제를 강화한다고 WTO에 통보하였다.

이는 EPCA에 따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외부전원공급장치 및 배터리 충전기의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휴대폰, 노트북, MP3 플레이어, 장난감, 진공청소기, 면도기 등 일반·산업·상업용 제품에 사용되는 외부전원공급장치(EPS) 및 배터리 충전기에 대하여 외장형 전원장치의 최저효율, 무부하 상태의 대기전력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배터리 충전기 종류별 최대 연간 에너지 소비량 기준치를 수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은 에너지부(DOE)에서 고시한 기준에 따라 FTC에서 라벨링 제도를 운영하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제품은 판매 및 수입이 금지된다.

우리 정부는 2012.11월 WTO TBT 위원회 기간 동안 양자협의를 통해 EU의 규제와 미국의 에너지스타보다도 과도한 동작모드 시 최저 에너지 효율, 무부하 최대전력 소모기준을 EU 혹은 에너지스타(Energystar) 기준으로 조정하여 줄 것과 배터리 충전기 규정의 대상제품 및 에너지소비 계산식도 동일하게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미국으로부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LED 램프 시험기준

2012.4월 미국은 에너지 관리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에 따라 실시하는 연방통상위원회(FTC) 라벨링(Lighting Facts) 시행을 위해 LED 램프에 대한 검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WTO에 통보하였다.

이는 EPCA에 따라 조명기기의 에너지 효율, 소비전력 등에 대한 라벨링을 부착하여 소비자의 고효율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방통상위원회(FTC) 라벨링은 강제사항으로서 최소 에너지효율기준에 미달한 제품은 판매가 제한된다.

한국 정부는 2012.11월 WTO TBT 위원회 기간 동안 양자협의를 통해, 광학특성 측정을 위한 1,000시간 시즈닝(seasoning)요건, 램프 사용방향에 따른 시험요건, 수명평가를 위한 온도조건, 수명표기, 색온도 표시기준 등

국제표준과 다른 요건들을 국제표준과 부합화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미국으로부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위생 및 식물 검역조치(SPS)

식품안전현대화법

미국은 2011.1월 사전예방을 통한 식품공급 안전성 보장 및 국민건강 보호의 목적으로 식품안전현대화법을 제정하고 발효하였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 및 식품(품목 1~4부) 등에 대한 사전예방 관리 및 통제를 강화하고, 수입식품에도 국내생산식품과 동일한 기준 강제, FDA의 집행권한 강화 등이다. 이에 따른 해외식품제조업체 실사 실시로 국내업체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시행관련, 예방, 검사, 대응, 수입식품 등의 기준 및 상세의무에 대한 하위규정 제정을 추진 중인바, 2013.11월 현재, 5개의 하위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중에 있다. 5개의 하위규칙(안)은 ①농산물의 재배, 수확, 포장, 보관에 대한 기준, ②식품관련 우수제조기준 및 위험분석과 위해기반 예방통제, ③외국공급자 검증제도, ④제3자 검사·인증기관 승인규정, ⑤사료관련 우수제조기준 및 위험분석과 위해기반 예방통제 등이다. 식품안전현대화법 및 하위규칙 시행으로 인해 국내 농산물 및 식품 생산업체의 FDA실사 및 안전성 검증 등에 대한 의무부담이 확대되어, 대미 농산물 및 식품 수출 감소 등 수출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삼계탕

한국산 삼계탕(HS 1602.32.1010,1090,9000)의 수입허용과 관련하여 미국의 입법절차가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 2004.12월 미국에 공식 수입허용 요청 후 현재까지 9년 이상이 경과되고 있다. 2008년 미국이 동등성평가 관련 국내 현지조사를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 작업이 진행 중으로 최종법안에 대한 공포는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미 삼계탕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U

EU는 우리나라의 제3~제4대 교역국 지위를 가지는 경제통합체이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EU 상품 수출입액은 각각 494억 달러와 504억 달러이며, 대EU 상품 무역수지는 1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2년 우리나라의 대EU 주요 수출품목은 기계류(44.9%)와 전기전자(28.1%)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기계류(35.9%), 화학공업제품(16.7%), 전기전자(15.6%), 광산물(11.4%) 등이다. 한·EU간의 상품 무역은 2002~2008년 동안 크게 증가(연평균 16.8% 증가)하였으나, 2009년 남유럽에서 시작된 EU 재정위기가 유로권으로 확산되면서 한·EU간 상품 무역은 연간 1,000억 달러 내외의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1962~2013.9월 누적액(신고금액) 기준, EU는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 국가³로, 우리나라의 전체 IFDI 중에서 EU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3.0%(706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EU의 대한민국 투자는 2011년 50.3억 달러로 최고치(전체 IFDI 중 36.8%)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에는 27.2억 달러(16.7%)로 감소되었다. EU의 대한민국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보험(27.2%), 유통(14.9%), 전기전자(11.0%), 화공(9.3%), 비즈니스서비스(6.6%) 등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EU OFDI는 1968~2013.9월 누적치(실투자금액)가 334억 달러이며, 업종별 투자 비중은 서비스업이 47.4%, 제조업이 31.7%, 광업이 20.9%이다.

한·EU FTA는 2009.7월 타결되고 2011.7월부터 발효되었다.

3_ EU는 국가가 아닌 경제통합체이지만 편의상 국가로 명시하였다.

정부조달

체코의 공공기관 자동차 조달 차별조치

체코는 공공기관 자동차 조달의 경우 충족하기 어려운 입찰 조건을 제시하고, 자국산과 외국산 자동차의 입찰 조건을 차등화하고 있어 외국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체코철도공사(2012. 3월)와 재무부(2013.3월)의 조달 입찰에서 최소길이 조건을 제시한 바 있으며, 프라하공항공사(2012.10월) 조달입찰에서는 자국 브랜드인 스코다 자동차와 스코다 이외의 차량 납품으로 구분하고, 스코다 이외의 차량은 서비스 비용도 입찰가격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입찰조건을 차등화 하여 외국산 자동차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였다. 이러한 차별적 조건 요구는 WTO GPA 제3조 2항(내국민대우) 및 6조 1항, 2항(기술규격 규정)에 위반 소지가 있어 우리나라 유관 부서에서 체코에 개선요청을 하였고, 이에 체코 지역개발본부는 입찰 공고 관련 표준 샘플을 마련 중이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LED 에코디자인 기준

2012년 EU는 「Directive 2009/125/EC」에 의거 에너지 효율 강화를 위한 LED 에너지 효율규제 도입 계획을 WTO에 통보하였다. EU의 LED 에너지 효율규제는 소비자들이 조명기구를 구입할 때 충분한 정보에 근거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의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동 규제에 따라 EU는 LED 등 조명기기의 최저 에너지소비효율과 기능성,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해당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유럽시장 내에서의 판매를 금지한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양자협정 및 특정무역협정 제기를 통해 LED 램프의 장점과 기술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EU의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EU는 ①형광등보다 더 높은 가격의 LED 램프 수명 요건을 형

광등과 다르게 적용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며, ②LED 패키지 상태에서 3,000시간 수명 검사를 통과한 완제품에 대한 3,000시간 테스트 면제요청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불소화온실가스 사용기기

2013년 EU는 「불소화온실가스에 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규정안 (EU/91)」에 근거하여 국내 기구에 의한 법 집행 강화 및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규정(EC No 842/2006)을 유지하면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미미한 수정을 하였다.

변경된 규정안은 EU의 대량 HFC 물질 공급의 양적 제한에 관하여 기기에 사용되는 양도 대량 HFC 물질의 총 출시(total placement)에 대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한도(cap)와 함께 양적 제한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⁴

규제를 받는 제품은 부록 2 및 제안서 부록 1에 나열된 불소화온실가스(수소화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이 있으며, 추가로 해당 물질들을 포함하거나 필요로 하는 제품 및 기기인 냉장고와 냉동고, 에어컨 기기 및 열펌프, 화재예방 시스템, 전기 스위치기어, 에어로졸 스프레이, 불소화온실가스 용기, 용매 및 거품 등을 포함한다.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

EU집행위는 2005년부터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⁵을 시행하였으며, 이는 폐전기전자제품 발생의 사전 예방과 재사용, 재활용, 재생 등으로 폐전기전자제품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_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TBT 뉴스레터 2013.5월 TBT 통보문 동향 참고

5_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인 WEEE는 EU에서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의 폐기에 대한 회수처리에 대한 규제내용이다.

외국 기업이 EU로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할 경우, EU내에서 판매되는 교류 1,000V, 직류 1,500V 미만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과 제품에 포함 되는 부속품, 하위 조립품, 소모품 등에 적용되며, 생산자 및 제조자는 반드시 지침을 따라야 한다.⁶

특히 전기전자제품과 일반 도시폐기물을 구별하여 수거할 수 있도록 Symbol을 부착해야하며, 브랜드명, 상표 또는 각국 생산자 등록기관에 기록된 이름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생산자는 EU 회원국별로 2005.8.13일 이후 출시되는 제품에 대해 재활용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국내 수출기업들은 해외 기술규제를 통과하기 위해 국내 시험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인증 비용 부담은 물론 하나의 제품에 해당하는 규제품목이 다양해 규제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생 및 식물 검역조치(SPS)

향미료 규제

2013.5.22일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은 향미료인 ‘3-acetyl-2,5-dimethylthiophene’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유럽식품안전청은 ‘3-acetyl-2,5-dimethylthiophene’이 유전적 정보를 담은 세포인 DNA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유전자 독성물질이어서 섭취시 인류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유전자 독성물질이 음식에 고의적으로 첨가되어서는 안되며,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해당 물질은 EU에 의해 승인된 향미료 목록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유럽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반드시 해당 물질을 제외하고 제품을 생산, 수출해야 한다.

6_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웹사이트 참고 (2013.12.18 접속)
http://www.compass.or.kr/known/eu_01_view.asp?idx=47&page=3

지식재산권

삼성 FRAND 독점혐의 조사

2011년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 3G 휴대전화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특허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애플은 삼성전자가 타사 대비 높은 라이선스 가격을 요구했다는 이유를 들어 FRAND(Fair, Reasonable & Non-discriminatory)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를 제소하였다. 2012.1월 EU는 삼성전자의 반독점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분쟁은 EU 기업이 아닌 제3국가 기업 간 분쟁이기는 하나, EU의 결정은 삼성전자가 EU 국가 내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제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 Emissions Trading System)는 28개 EU 회원국과 각국 기업에 배출 가능한 이산화탄소량 한도를 규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가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2.11월 EU는 ETS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거센 반대⁷⁾에 부딪혀 1년간 ETS 도입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탄소배출감축에 합의하면서 EU도 ETS 도입을 재추진하게 되었고, 2013.10.16일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상공을 지나는 외국항공사에 대해 ETS를 적용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7_ 2012.11월 EU의 ETS 도입을 시도할 당시 인도, 미국, 중국 등의 심한 반대가 있었다. 당시 인도는 인도영공을 폐쇄한다며 반박하였고, 중국 항공사들은 에어버스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항공기 55대의 주문을 동결하였다.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EU의 ETS 수정안은 EU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동 수정안에 대해 인도 정부는 ICAO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미국의 존 슌 공화당 상원의원 대표도 EU의 ETS 수정안이 국제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

2012년 기준 한국의 대일본 상품 무역은 수출액이 388억 달러, 수입액이 644억 달러, 무역수지가 256억 달러 적자이며, 우리나라 상품 무역에 있어 일본은 중국 다음인 제2대 교역국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일본 주요 수출 품목은 광산물(26.5%), 전기전자(22.8%), 철강금속제품(14.2%), 기계류(12.0%)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기계류(25.4%), 화학공업제품(23.4%), 전기전자(19.6%), 철강금속제품(18.9%) 등으로 자본재·중간재의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일본 상품 무역수지는 2010년 사상 최대 규모인 36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일간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일본으로부터 유치된 IFDI(1962~2013.9월 누적액, 신고금액 기준)는 348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IFDI 유치금액 중 16.2%를 차지(EU, 미국에 이어 제3대 투자국)하며, 주요 투자업종은 전기전자(20.8%), 비즈니스서비스(13.4%), 화공(12.0%), 유통(9.5%) 등이다. 우리나라의 대일본 OFDI(1968~2013.9월 누적치, 실태투자금액 기준)는 44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OFDI에서 1.9%에 불과하며, 주요 투자 업종은 유통(29.4%),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17.9%), 부동산·임대(12.9%) 등 대일본 투자액의 82.8%가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이다.

한·일 FTA는 2003.10월 협상 개시가 선언되고 제6차 협상까지 이루어졌으나 2004년 말부터 현재까지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은 한·중·일 FTA, RCEP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수입규제

일본 수산물 수입쿼터(IQ)

일본은 자국 어업자와 가공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김 등 수산물에 대하여 WTO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수입쿼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품목은 김, 고등어, 꽁치, 대구, 오징어, 청어 등 17개 품목이며, 할당방식은 ①對한국 쿼터(김) ②글로벌 쿼터+對한국 쿼터(방어 등 9개 품목) ③글로벌쿼터(오징어 등 7개 품목)로 나누어진다. 대한국 국별쿼터 대상 수산물 9개 품목(②의 경우)에 대해서는 금액할당으로서 △수요자할당, △상사할당, △선착순 할당의 방식이 있다. 일본은 전체금액 및 세부쿼터별 수량제한을 두고 있으며, 쿼터 신청시기 및 접수기간 제한 등의 복잡한 운영상 제한까지 더해져 수출에 어려움이 많다.

2013년도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 수립·공고

일본은 2013.3월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을 수립·공고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식품에 대해 수입자에 ‘검사명령’을 발동하기로 하였다. 한국의 제품검사 대상품목은 돼지고기, 장어, 장어 및 그 가공품, 양식광어 및 그 가공품, 바지락 및 그 가공품, 미니토마토 및 그 가공품, 파프리카 및 그 가공품 등 12개 품목이다. 또한 2013년도에는 병원미생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장내출혈을 일으키는 세균검사를 실시한다. 농약검사에 대해서는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이 일정량 이상 잔류하는 하는 경우, 식품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Positive List System’을 계속 운영하기로 하였다.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유해성분은 일률기준치 0.01ppm을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잔류농약 초과검출로 인해 통관이 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통관

운송업의 한일 더블넘버 제도 대상 확대

한일간 더블넘버제도로 인해 선박에 더블넘버를 달 수 있는 트럭채로 선적하여 한국 또는 일본 도로에 내려 그대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제휴처인 한국 르노삼성과 닛산자동차 후쿠오카 공장 간에 같은 트럭으로 화물을 나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트럭은 한국에서 수송을 할 수 있지만 한국트럭은 일본 국내 배기가스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송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특정물품, 승인된 기업 간의 루트로만 운송이 가능하여 돌아오는 편에서도 다른 제품을 선적가능하게 하는 등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돌아오는 길에 다른 물품의 선적이 가능해지면 물류 비용 감소 및 제도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출항전보고제도 시행 예정

일본 관세국은 일본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선적항 출항 24시간 전까지 적하목록을 일본 세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출항전보고제도를 2014.3월 시행할 예정이다. 보고대상은 일본에 입항하려고 하는 외국무역선에 선적된 해상 컨테이너 화물이며, 선박회사 및 이용운송사업자가 파악하고 있는 적하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방법은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적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고기한까지 보고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입찰정보 접근 제한

일본의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업자등록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별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에 각각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번거롭고 등록 후에도 입찰정보가 인터넷 등에 일괄적으로 공표되지 않아 업체들이 일일이 해당 기관에서 입찰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한 국제입찰의 경우 입찰 관련 정보가 모두 일본어로만 제공되어 외국 업체들의 정보 접근이 어렵다.

위생 및 식물 검역조치(SPS)

약사법에 따른 오미자차, 인삼차 등의 수입규제

한국에서는 건강식품으로 분류되는 오미자차, 인삼차 등 건강보조제품을 일본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에 의해 제조·판매·수입 면허 및 허가·승인이 필요하다. 일본은 건강식품에 대한 분류가 엄격하여 오미자차, 인삼차 등 건강보조식품을 건강식품이 아닌 한방재료를 사용한 약품으로 분류하고, 약사법의 규제를 받도록 한다. 따라서 이들 품목은 여타 식품에 비해 복잡한 수입 및 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일본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일본 내의 웰빙열풍으로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본의 복잡한 수입 및 허가 절차로 인해 많은 한국업체들이 오미자차, 인삼차에 대한 수출을 포기하고 있다. 일본 자체의 규정이긴 하나 외국기업의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동분포병해충 검역 문제

일본 검역당국은 한일 공동분포 병해충으로 일본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병해충도 검역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국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병해충은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하여, 발견되어도 별도 검역 조치 없이 통과가 가능하다. 1998년 이후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52종을 비검역병해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일본측은 2013.8월까지 40여종을 인정하였지만 12종은 아직 미지정한 상태이다. 신선농산물에서 병해충이 발견되면 훈증조치로 인한 품질 저하 및 추가비용 발생으로 수출에 애로가 발생한다.

수입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일본 소비자들은 최근 급증하는 한국 가공제품의 원료 및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해 원료 및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는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원료산지는 가공식품의 원료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TPP 체결 후에는 여러 국가에서 가공된 제품이 복잡하게 얹혀 원료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본의 기준은 더욱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시 변경될 전망이다. 가공식품의 원료·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품목은 녹차 및 녹차음료, 떡, 볶은 땅콩류, 흑설탕 및 그 가공품, 곤약, 건 버섯류, 조미한 식육 등 22개 품목이다.

기타

건설분야 규제

일본의 건설업법에서는 경영관리책임자 자격요건, 건설현장 감리기술자 배치 요건, 경영사항 심사시 평가가산점 인정요건 등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본 건설업법에 따르면 특정 건설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원 중 상근인자 1인이 허가 업종에서 5년 이상 경영업무 관리 책임자 경험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기업들이 5년 이상 경영 경력이 있는 임원을 일본에 파견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일본은 하청계약 청부대금 합계 3천만 엔 이상의 공사 현장에는 감리기술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자격조건으로 '1급 국가자격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외국의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건설업체의 기술력 평가에 있어서도 감리기술자 강습 수강자에 대한 가산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의 강습은 불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요건들은 일본 내부의 규정이지만 외국 건설업체의 진출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활어운반 차량의 일본내 운행

일본에서 한국 활어운반차는 일본항만 보세구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 일본 활어운반차는 임시운행 허가증만 있으면 등록 없이 국내 운행이 허용되기 때문에 한국 활어운반차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적용을 받고 있다. 일본은 체약국간 차량 등록 없이 일시 운행이 가능한 ‘도로 교통에 관한 협약’의 적용을 승용차에만 인정하기 때문에 활어운반 차량 등의 상업용 차량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활어운반 차량 일시운행 승인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은 일본 내 근거 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일본항운협회 사전협의제도(터미널 변경자유 허용)

일본 항구에서 터미널 입출항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한국 선사는 민간 단체인 일본 항운협회 등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일본은 항만 입출항 및 항만 노동자의 고용과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일본 항운협회와 사전 협의를 요구함으로써 일본 하역회사와 항만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 특히, 입출항 변경 시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경미한 안건은 전월 20일까지, 터미널 고용상황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안건은 전전월 20일까지 협의신청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다수 국가들의 경우 운항 선박 변경 시 효율적인 하역작업을 위해 터미널 입항 7일 전후로 통지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일본은 과도한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외국 선사의 자유로운 터미널 이용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

가격통제

일본은 국내 양돈농가 보호를 위해 돈육에 대한 차액관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UR협상 후에도 동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차액관세제도는 ①사전에 기준액을 정하고, 동 기준액 이하로 수입될 경우 기준액과 수입가격간 차액 전액을 관세로 부과하고, ②가격이 높아 기준액 이상으로 수입될 경우

종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차액관세제도는 돈육뿐만 아니라, 유제품, 완두콩, 팥, 쌀, 보리가루 등 곡류와 커피조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 적용된다. 차액관세제도로 인해 한국산 돈육의 대일 가격경쟁력이 저하되어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

중국은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품 무역액에서 20.2%를 차지(수출 24.5%, 수입 15.5%)하는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대중국 상품 수출입액은 각각 1,343억 달러와 808억 달러이며, 상품 무역수지는 51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3년 1~10월 대중국 상품 무역에서도 수출이 1,200억 달러, 수입이 687억 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상품 무역수지는 2005~2008년 동안 흑자 규모가 다소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08년부터는 다시 크게 증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은 전자전기제품(47.0%), 화학공업제품(19.3%), 기계류(14.4%)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전자전기제품(39.9%), 철강금속제품(16.2%), 화학공업제품(11.3%)이고 섬유류(7.2%)와 농림수산물(5.3%)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1962~2013.9월 누적액(신고금액)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IFDI 유치금액 중 중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2%(47.8억 달러)로 EU(33.0%), 미국(24.5%), 일본(16.2%)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중국의 대한민국 주요 투자 업종은 부동산·임대(17.1%), 비즈니스서비스(15.2%), 운송기기(15.2%), 화공(12.1%), 전기전자(10.7%) 등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중국 OFDI는 1968~2013.9월까지 누적액(실투자금액 기준)이 431억 달러이며, 우리나라 전체 OFDI에서 중국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미국 다음으로 높다. 우리나라의 중국 투자는 주로 제조업(특히 전기전자, 운송기기, 화학, 금속 등)에 집중되어 있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유통과 금융 분야에 많이 시행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간에는 현재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등 3가지의 지역무역협정 협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수출통제

희토류 수출통제

중국은 자국의 법⁸에 근거하여 전기·전자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희토류의 수출에 쿼터제를 두고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하고 있다. 희토류 수출쿼터제의 경우 2012년 기준 총 쿼터량이 31,130톤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한 수준으로 제한되었으며, 금년에도 희토류 수출기업 목록과 1차 희토류 수출쿼터량(2012년 총 수출쿼터의 50%)이 발표되었다. 또한 중국 상무부는 “2013년 희토류 수출쿼터 신고 조건 및 절차”를 발표하여 희토류의 수출쿼터를 신청하는 생산·유통업체에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과 엄격한 신청절차를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수출되는 희토류에 2011년 기준 15~25% 수준의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USGS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48.4%를 중국이 보유하고 있고,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7%를 중국이 맡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지난 2009년부터 중국이 자국의 희토류 산업 관리를 강화⁹하고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함에 따라 세계 전기·전자 기업들이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희토류의 국제가격이 상승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비철금속 수출통제

중국은 비철금속 분야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의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알루미늄, 전기동 등 원재료의 수출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최근 중국의 7대 제련사에 한해 전기동 수출을 허용하는 등 비철

8.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는 중국의 관련 법령으로는 <울프럼주석안티몬이온형희토류 광산을국가가실행하는보호성채굴광산유형에귀속시키는국무원의통지>(1991), <외상투자희토류업종관리집행규정발행에관한국가계획위원회의통지>(2002), <희토류업종지속건강발전에관한국무원의약간의의견>(2011), <희토류합금주철을희토류수출쿼터허가증관리에귀속하는공고>(2011) 등이 있다.

9. 오종혁·김부용(2011), 「중국 내 희토류 산업 관리 강화와 향후 전망」, KIEP 지역경제포커스 Vol.11 No.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금속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비철금속의 수출을 규제함에 따라 국제 원자재가격이 왜곡되고 중국 내수시장에서 외국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입규제

중고품 수입 규제

중국은 동식물 보호,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HS 8단위 기준 144개 품목¹⁰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하였다. 중고 기계 및 전자제품(수입금지화물 2차 금지품목)은 제한적으로 수입이 허용되나 승인절차가 복잡하고 중고 기준이 불명확하다. 중국은 <수입금지화물목록>에 의거,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 신청 및 허가절차를 밟게 하고 있는데, 2차 수입금지 목록(중고 기계 및 전자제품) 중 상무부 전자상품수출입공사가 인정한 경우는 제한적으로 수입이 허용된다. 외국계 기업이 이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소재지의 전자상품관리사(機電產品管理司)를 통해야 한다. 이러한 중고제품에 대한 수입절차에 대해 수출국들은 중국 현지공장으로 중고기계설비 수출시, 선적 전 중국 질량검사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고, 승인절차가 복잡하며, 제출서류가 많고 검사기간이 오래 걸리며, ‘중고’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달

10. 중국은 동식물 보호,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총 6차례에 걸쳐 144개의 수입금지품목을 지정

- 제1차: 호플, 서우각, 아편 등 국제조약에 따른 7품목 (2001년 12월 20일 발표)
- 제2차: 중고 자동차, 중고 환자감호기기 등 중고 기계, 전자제품 68품목 (2001년 12월 27일 발표)
- 제3차: 생활폐기물, 의료폐기물 등 환경오염 유발 고체 폐기물류 18품 (2001년 12월 23일 발표)
- 제4차: 중고 의류, 피혁폐기물 등 환경오염 유발 고체 폐기물류 16품목 (2002년 7월 3일 발표)
- 제5차: 폐기냉장고, 폐기컴퓨터 등 환경오염 유발 고체 폐기물류 21품목 (2002년 7월 3일 발표)
- 제6차: 폴리염화페닐, 다이옥신 등 국제조약에 따른 화학제품 17품목 (2005년 12월 31일 발표)

라 수출에 애로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자동수입허가증 발급 지연

중국은 합리적인 외환관리, 주요 상품 및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쇠고기, 우유, 석탄, 천연가스, 이동통신제품, 항공기, 자동차제품 등 53개 분야 777개 품목에 대해 수입허가증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주요 수입 상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일종의 신고 제도이다. 그러나 수입에 필요한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받는데 장시간이 소요되어 외국기업의 중국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규상 검열기준 30일 이내에 허가증 발급이 가능하나, 발급과정에서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한 달 내 발급이 거의 불가능하며, 지역마다 상이한 규정이 적용될 뿐 아니라, 규정이 자주 변경되고 지방정부에 하달되는 데에도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

통관

통관절차의 일관성·투명성 결여

중국내 각 지방 해관(세관)의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산정 등이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있어 외국 기업들이 납품지연·계약파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면 도수가 21도인 주류 제품에 대해 A해관은 도수를 높이라고 하고 B해관은 도수를 낮추라고 요구한다거나, 동일 해관 내에서도 해관장이 바뀌면 이전 관행(history)에 의해 관리되어온 부분은 무시되고 정책이 바뀌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해관의 제품 품질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제품의 섹택(色澤), 크기 등이 자의적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중국 중앙정부의 수입금지 해제 결정이 지방정부까지 전달되지 않아 외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자동수입허가제도 시행, 특수위생허가증 요구, 가소제보고서 제출요청 등 수입제품에 대한 사전 수입조건을 고지하지 않아 국내 업체들이 피해를 보

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2009년 한국 구제역 사건 발생 후 중국은 사전고시 없이 자동수입허가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이를 취득하는 데는 1년 이상(최대 3년)이 소요된다. 불시에 관련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납기를 지키지 못하여 이미지가 악화되고 동시에 거래처나 대외 홍보 시 해명자료가 필요하나 관련기관에서 통지서 등 근거 제시를 거부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어묵의 경우 수산물 어획증명이 포함된 위생허가증을, 주류나 음료의 경우 가소제검사보고서를 요구하는 등 사전 고시 없이 관련 서류를 요청하기도 한다.

한편, 부당한 행정 처리 및 행정요구에 의해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산물(마른미역, 건새우 등) 비닐포장 제품을 식품으로 판단하는 중국 상검국과 수산물로 판단하는 중국 식약청 간의 소관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해당 상품을 자체 폐기한 사례도 있다.

또한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각 지역 해관마다 또는 동일한 해관이라 하더라도 해관원마다 HS 코드 분류가 상이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이루어져 담당자가 바뀔 경우 새로운 세번이 적용되어 관세가 인상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예컨대 중국 해관은 바나나맛 우유를 음료로 분류하여 유제품에 적용되는 15%의 관세 대신 35%의 관세를 적용하고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ion)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 외에도 통관 기간이 길고 예측하기 어려워 외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항구별로 상이한 라벨·포장기준 적용

포장, 라벨 등 제품표기사항의 등록 문제가 각 지역 상검국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등 통일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상해 상검국의 비안(備案, 통관 전 중국 세관의 심사절차)내용이 청도에서 통용되지 않고 심지어 청도 내에서도 항만에 따라서 비안절차가 다르고 통용이 되지 않는다. 청도 상검국의 경우 외포장 비안 등록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1개 제품 신청시 처리에 1~3개월이 소요되는 등 업무진행이 매우 느리다.

수입식품의 중국 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어 라벨링이 필요하며, 2011.6월 이후에는 스티커 형식의 라벨링이 금지되고 반드시 포장지 라벨링만 가능하다. 특정 해관에서 라벨 기준이 변경된 2~3개월 후에는 기존 라벨을 모두 폐기해야하는데, 캔 맥주와 같이 종이 라벨이 아닌 경우에도 라벨 기준이 바뀌면 전 물량을 폐기해야 한다.

한편, 통관 에이전트에서 지정한 라벨 업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지정회사에서 제작하여 추가비용 발생하고 있다. 지정 라벨업체 사용의 요구는 GATT 8조 수입과 수출에 관련된 수수료 및 절차의 위반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토가 요구된다.

통관항 임의 지정

중국의 자동차산업정책 제58조 등에 따라 완성차(자동차)는 대련(신항), 천진(신항), 상해, 황포, 만주리, 황강(심천) 등 6개 지정항구를 통해서만 수출이 가능하다. 중국은 수입의약품에 대해서도 지정된 19개 도시(항구)를 통해서만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각 도시(항구)별로 요구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어 행정절차상 지역 간 통일성이 결여되고, 최초로 수입신고한 항구를 통해서만 이후의 수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시장이 확대될 경우 물류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중국 내 해운노선 변경 압력으로 인해 효율적인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중경→상해(통관) → 연운항(통관) → ferry 이용 →한국」 노선을 이용하고 있는 운송사들은 중경세관으로부터 「중경(통관)→ 상해(통관)→ferry 이용→한국」 노선을 이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해당 운송사의 경우 연운항을 이용하는 것이 운송비 및 배송시간 측면에서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중경세관은 세수 확보를 위해 중경세관에서 통관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

보조금

철강산업 보조금

중국은 철강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해당산업에 대해 보조금, 세제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은 고율(17%)의 증치세(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후 이를 철강 산업을 포함한 전략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수출시 차등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철강무역 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중국의 철강산업 보조금 지급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¹¹하고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관련 법령·제도·이행의 투명성 결여

중국의 정부조달체계는 중앙과 지방, 산업별, 관할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다. 중국의 정부조달 관련 법률은 「정부조달법」과 「입찰법」 두 가지로 혼재되어 있으나, 입찰법 시행조례 및 전자조달 관련 세칙은 구비되어 있다. 다만 정부조달법의 실시조례는 입법에 2년간 표류 중에 있다. 조달기관 또한 집중기구, 대행기구, 기업 등으로 다양하고, 지방정부별로 시행방법 또한 상이하다. 정부조달 입찰정보는 중앙정부의 집중구매목록을 제외하고는 각 조달센터, 조달대행기관, 지정매체 등에 수시로 발표되고 있어 외국 기업들이 신속히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응찰시한이 조달 공고일부터 20일로 GPA 최저기준인 40일 보다 짧다. 이와 같이 중국의 정부조달 체계는 매우 복잡하여 외국 기업들은 중국 조달시장에 대한 신속한 정보습득이 어렵고 이행과정에서의 투명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¹¹ '12년 말 현재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보조금 상계조치 조사 또는 상계관세 부과 중인 사례는 무려 20여건에 달함.

정부조달시 외국기업 차별

중국은 정부조달 시 자국 기업을 우대하는 경향이 강하며 수입 제품은 조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중국의 「정부조달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수입 제품은 정부조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문상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달시장에 진출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법규와 실제 이행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게다가 「정부조달법」 10조에서는 정부조달 시 자국산 구매정책을 명시하고 있고, 이외에도 각종 법규 및 정책에 'Buy China' 조항들이 산재되어 있다. 특히 재정부에서 관리하는 《자주혁 신상품목록》에 포함된 물품의 조달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국산화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외국제품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다만 중국은 WTO GPA 가입국이 아니며, 여타 여하한 국제규범에서도 자국정부시장 개방을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중측의 이러한 관행을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는 상황이며, 향후 중국의 WTO GPA 가입과정에서 다자차원에서 점진적 해결모색이 적절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강제인증제도(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과 시장경제로의 발전, 무역확대 등을 위해 제품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제도 추세를 반영하여 강제인증제도인 CCC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2003.8월부터 중국 내에서 생산 혹은 수입되는 제품 중 CCC 인증 대상품목은 인증을 반드시 획득하여 CCC 마크를 부착해야 수입·유통·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CCC 인증 관리제도가 너무 포괄적이고 대상 품목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CCC 인증 대상품목은 2003년에 132개였으나 2006년에 일부 자동차부품이 추가되었고, 2007년에는 완구제품이, 2008년에는 용제형 목기도료, 자기타일, 시멘트 동결방지제

등이 포함되어 2012.12월 현재 22개 분야 157개 품목으로 증가하였다.¹² 뿐만 아니라 인증절차는 총 6단계¹³로 진행되며 심사가 종료된 이후 인증서 발급 역시 영업일 기준으로 90일이 소요되는 등 인증에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차종 당 평균 5~7억 원의 인증 비용이 필요하고 인증 소요기간 역시 12~16개월로 유럽의 인증비용(1.5억 원) alc 소요기간(최대 4개월)에 비해 매우 과도하다.

한편, 인증을 이유로 과도한 서류 및 현장방문 등을 요구하여 기술유출 우려가 존재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인 5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갱신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외국 적합성평가기관의 실사결과를 적용하는 것을 불허하고 반드시 자국 심사기관에 의한 공장실사 결과만 인정하고 있다.

IT 제품

2010.10월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폐기 전자 및 정보 제품에 의한 환경오염의 관리 및 감축과 자원절약, 전자 및 정보산업의 지속적 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유해물질 표시 적용대상을 기존의 방송통신기기, 컴퓨터, 가전 제품 등 전자정보제품에서 직류 1,500v 이하, 교류 1,000v 이하로 작동되는 장비 및 부속품(사실상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강제인증을 실시할 예정임을 WTO에 통보하였다.

이로 인해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브롬계 난연제(PBB, PBDE) 등 6가

12_ 2012.12월에 발표된 CCC 인증 대상품목은 ①전선케이블(4종), ②회로 스위치 및 보호 내지 연결용 전기장치(6종), ③저압전기장치(9종), ④소형 전동기(1종), ⑤전동공구(16종), ⑥용접기(15종), ⑦가정용 기기(18종), ⑧음향 영상설비(방송용 및 실외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자제품 등은 제외)(12종), ⑨정보기술 장비(11종), ⑩조명장비(2종), ⑪차량 및 안전제품(16종), ⑫차량타이어(3종), ⑬안전유리(3종), ⑭농기계(2종), ⑮라텍스 제품(콘돔)(1종), ⑯전자통신 단말기(9종), ⑰의료기기(7종), ⑱소방제품(7종), ⑲안전기술 예방설비(5종), ⑳무선인터넷설비(1종), ㉑인테리어용 제품(3종), ㉒완구류 제품(6종) 등이다.

13_ 인증절차는 ①신청 및 접수, ②서류심사, ③제품검사, ④공장심사, ⑤공장시료 채취검사, ⑥평가 순이다.

지 독성 화학물질은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들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제품라벨 또는 포장에 유독물질 명칭, 회수이용가능 등의 정보를 표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성 화학물질

중국 환경보호부는 158개 화학품을 수출입제한유해화학목록으로 지정하고, 이들 물품에 대한 환경등기증(유효기간 2년)과 Fang-xing-dan(放行單) 제출 시에만 물품인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 때 환경등기증은 유해화학목록 제품에 대해 품목당 필요서류와 1만 달러를 환경보호부에 납부해야 발급이 가능하며, 수출계약서 별로 Fang-xing-dan이라는 수입허가서를 추가로 통관 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Fang-xing-dan 발급을 위해 최종 수요자의 환경보고서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기업은 수입 인허가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나 중국산 제품의 경우 유해화학목록에 해당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유통과 관련된 별도의 제한이 없어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이 존재 한다.

의약품

수입약품은 반드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이 발급하는 수입의약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수입 시마다 CFDA의 수입약품통관증 및 기타 증명을 해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입허가 심사 시 타국가의 약전(藥典, 공정서)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약전만 인정하며, 수입약품은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실험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부담되고 있다. 실제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약의 경우 최대 5년, 제네릭의 경우 3~4년이 소요되며, 임상실험 결과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6~12개월이 추가로 소요된다.

그리고 CFDA는 자국 내 동류약품의 포화정도에 근거하여 수입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비교임상을 하는 경우에도 매우 많은 숫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통관 시 마다 품질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의료기기

의료기기는 중국식품감독관리총국(CFDA)의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CFDA는 수입허가 시 규정과 관계없는 추가 임상을 요구하거나, 반복되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수입허가를 받는데 수술도구의 경우 1년, 임플란트의 경우는 2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가능 한 의료기기의 경우 산업보호 측면에서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타국의 임상실험을 인정하지 않아 중국에서 다시 임상실험을 해야 한다.

화장품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위생안전성 검사기간이 일반화장품의 경우 2개월, 특수용도 화장품의 경우 3~6개월이며, 위생허가증 발급도 8개월이 소요된다. 화장품의 제품 주기가 짧은 것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검사비용 역시 일반 화장품의 경우 개당 4~8천 위안, 특수용도 화장품의 경우 개당 1~3.5만 위안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검사와 허가증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위생허가증의 경우 매 제품별로 개개의 허가번호를 취득해야하기 때문이다. 립스틱을 예로 들면 색상별로 같은 색상도 1호, 2호, 3호 등 호수별로 모두 허가번호를 취득해야 한다. 그리고 인증서류 정확성 제고를 이유로 중국 당국은 배합표와 같은 기업의 기밀사항을 포함하는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위생허가증 발급신청 시 중국내 책임회사의 보증을 요구하는데, 이는 통상 대리상이 보증을 한다. 그러나 대리상과의 계약이 중도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며, 다른 대리상이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 과거 보증을 해주었던 대리상이 새로운 대리상에게 수권서를 작성해

주어야 하나 이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경과 천진의 경우 새로운 대리상이 수입을 할 경우 수권서가 필요 없으나 이외 지역에서는 반드시 수권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입화장품의 경우 제품출시 전에 위생허가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으나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비특수용도 화장품은 제품출시 후 2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어 중국산 화장품과 수입 화장품 간에 차별이 존재한다. 또한 비특수용도 화장품의 등록과정에 보완절차가 없어 오타, 오기 등 미미한 시정사항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허가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이외 화장품 라벨(중국어) 상에 모든 함유성분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위생 및 식물 검역조치(SPS)

식품 수입통관시 위생증명서 발급 요구

중국은 수출국이 발급한 위생증명서에 추가하여 수입통관시 자국의 위생증명서를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수출국에서 발급받은 위생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중국에서 별도의 위생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여 발급시일이 더 연장되고 있다. 수입국이 별도의 위생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¹⁴ 중국에서는 위생증명서 발급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가공식품의 경우 유통점 납품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한다. 중국은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중국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유통기간이 짧은 가공식품의 특성상 위생증명서 발급에 5일~2개월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은 대중국 수출에 있어 최대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이 위생증명서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신속한

¹⁴ (A사) 차 제품 중국 대형매장 납품, 위생증 발급에 1개월 소요, (B사) 신선우유 중국 수출시 위생증 발급이 가장 큰 애로요인, 신선우유는 유통기한이 14일이나 위생증 발급에 5일 소요, (C사) 라면의 유통기한이 5개월인데 제품을 소매상까지 전달하는데 평균 2.5개월 소요.

통관이 필요한 제품(신선우유 등)에 대한 과도한 요구는 그 자체가 장벽이 되고 있다.

특정 식품의 과도한 검역기준

중국은 어류, 새우류, 계류, 패류를 원료로 한 수산조미품(aquaticflavouring)과 김치, 젓갈, 조미김, 올리브유 등 식품에 대해 일반세균수, 미생물 규격, 시험절차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대중 식품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 중국이 김치를 자국의 절임채소인 '파오차이'로 간주해 100그램당 대장균수 30마리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중국 김치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중국은 g당 5,000마리 이상의 일반세균을 보유하고 있는 젓갈류 제품에 대해 통관을 불허하고 있다. 젓갈류는 통상 g당 100만 ~1,000만 마리의 일반세균을 보유하고 있는데, 미생물 지표는 △그램당 세균 총수(cfu/g): 8,000 이하, △대장균군(mpn/100g): 30 이하 등 두 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한다.¹⁵ 즉석김(조미김 포함)은 2009년 즉석김에 대한 별도규격 제정으로 일반세균수 규격은 삭제되었으나, 의무가 아닌 권장 규격으로 제정되어 실제로는 조미김에 일반세균수를 포함한 규격이 아직 적용되고 있다. 조미김의 경우 원초로부터 기인하는 일반세균수를 완벽하게 제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솔잎오일(적송유)의 경우는 중국 식약청 성분리스트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

보건(기능)식품 위생허가

중국의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은 매 품목마다 중국 식약청(CFDA)의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식품 수입을 위해 보건식품 등록신청 시 CFDA는 신청서, 제조법설명, 효능성분 및 검측방법, 효능평가보고서, 상표 등록 등을 포함한 총 22개의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¹⁶ 또한 위생허가

¹⁵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EU는 식품 통관 검역시 일반세균수 기준이 없음.

¹⁶ 처음으로 보건식품 수입 시, 반드시 CFDA에 보건식품 등록을 신청하여 제품번호를 취득 후, "보건식품 수입비준증서"에 따라 수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실험) 등록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보건식품의 경우 국가가 정하여 고시한 27가지 효능을 가진 제품에 한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하는데, 보건식품은 생산국에서 이미 생산판매된 지 1년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생산국이나 국 제조직의 관련 표준설명 및 생산판매국가에서 발급한 생산판매 증명이 있어야 한다. 중국의 경우 ‘성분구성(配方)’이 총 14가지를 넘지 않아야 하나, 대부분의 한국 제품은 20여 가지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등록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5년근 홍삼을 기준으로 5년근 이하는 식품, 5년근 이상은 보건식품으로 분류하여 수출시 의약품에 준하는 제약을 받고 있다.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중국 내 모조품 및 해적판의 유통이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규 집행이 미비하고 단속이 미흡한 점이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재권 관련 상표침해, 상표도용, 특허권 침해, 불법복제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자국기업 보호 및 즉시 판단 유보 등의 이유로 단속을 회피하거나 경미한 행정 처벌을 내리는 실정이다. 특히 영화, 음악 등 한류 콘텐츠의 불법복제로 인해 ‘콘텐츠 창출⇒해외진출⇒회수⇒재투자’의 단계별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더불어 특허나 지재권 출원 후 등록 심사에 2~4년의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권리행사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도 많다.

서비스

법률서비스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법률서비스 시장을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¹⁷ 중국은 WTO 가입 서비스시장 개방 약속(서비스 양허표)에 따라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에 대해서는 시장접근 및 내

국민대우상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리고 상업적 주재에 대해서는 시장접근상 지역 제한과 설립 형태 제한(대표사무소(대표처)만 허용)¹⁷을 두고 대표사무소의 업무범위를 자격취득국법 및 국제법 자문으로 제한하고 외국인변호사에 대한 경력요건(2년 이상)을 요구하며, 내국민대우상 외국 인변호사는 1년에 6개월 이상 중국에 체류해야 한다는 거주요건을 적용하고, 외국 로펌의 중국대표사무소에서 중국인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두고 있다. 중국에서 법률서비스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6개월 이상 중국 내에 주재하는 변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만 대표사무소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고 3년이 경과한 후에만 다른 지역에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외국 법률서비스 대표사무소에 대해서는 이익의 25%만큼 세금을 부과하고, 세후 순이익을 본국에 송금할 때 다시 세후 순이익의 10%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가 있다.

유통서비스

중국은 WTO 가입 약속에 따라 유통업의 취급 품목 제한 및 외국인지분을 제한을 대부분 철폐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까지 외자 위탁중개기업·도매기업이 담배와 소금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외자 소매기업도 담배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소매업 분야에서 책, 신문, 잡지, 제약품, 농약, 멀칭 필름, 가공유 및 중국 WTO 가입 의정서 부속서(Annex) 2a에 기재된 제품을 취급하면서 중국 내 30개 이상의 체인점 매장을 가지고 있는 소매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다수지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17_ 각국의 다자·지역 통상협상 서비스분야 양허 내용을 살펴보면 자격취득국법 및 국제법을 자문하는 외국법자문사(FLC)는 주로 허용하지만 주재국법의 자문은 불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8_ 여타 분야와 다르게 법률서비스 분야에서는 대표사무소의 영리추구행위를 허용하였다.

관광서비스

중국은 WTO에 가입한 후 단계적 시장 개방 약속에 따라 관광서비스 분야의 제한을 많이 개선하거나 철폐하였다. 예를 들어 WTO 가입 당시 중국은 여행알선대행서비스(여행사)에 대해 합작투자요건을 두고 외국인다수지분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외국여행사의 등록출자액을 4백만 위안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WTO 가입 후 「외자여행사투자특별규정」, 「여행사조례」 등에 따라 100% 외국인지분 보유를 허용하고 등록출자액 상한을 2.5백만 위안 이상으로 완화하였다.¹⁹ 이와 같은 시장개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100% 외국인지분 보유 여행사 및 합작여행사가 아웃바운드 영업(중국인의 해외여행(홍콩·마카오·대만여행 포함))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10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중국 정부는 시범적으로 중여도이어·TUI, 국여운통·American Express, 중신여행사·JTB 등 일부 합작여행사에 대해 아웃바운드营业을 허용한 바 있다. 한편 중국은 관광안내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

문화콘텐츠

중국은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해 높은 투자장벽을 두고 있다.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도 1) 신문 관련업체, 2) 도서, 신문/잡지의 출판, 총발행과 수입업무, 3) 음향제품과 전자출판물의 출판, 제작과 수입업무, 4) 각급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방송TV채널, 방송TV전송봉사네트워크, 5) 방송TV프로그램제작경영회사, 6) 영화제작회사, 발행회사, 영화상영회사연맹, 7) 뉴스인터넷홈페이지, 네트워크시청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접속서비스영업 장소, 인터넷문화경영, 8) 녹화제품방영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게임 분야는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 인터넷문화경영 항목에

19_ 중국은 2009년 5월 이후 등록출자액을 내국민대우인 30만 위안으로 완화하고 연간 매출액 요건을 폐지하였다.

해당되어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며, 사업에 필요한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ICP)²⁰의 독자적 발급이 불가능하며 판호(ISBN)²¹ 발급에 있어서도 내외국인간 차별이 존재한다.

중국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등에 따라 영화의 제작·수입·배급을 중국 기업에게만 허용하고 외국인의 투자는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영화상영업은 합작투자 요건(외국인지분을 최대 49%까지 허용)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된다. 한편, 중국은 WTO 가입 양허에 따라 외국영화의 수입을 연간 20편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영화제작사와 수익배분방식), 이외에 판권구매방식으로 허락받은 30편의 영화를 추가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여 연간 외화의 총 수입 편수는 50편까지 가능하다.²² 중국 내에서 외국 영화사의 설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합작영화의 제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합작영화를 제작할 때 중국 당국은 2회의 심의를 할 뿐만 아니라 주요 연기자 총 수의 1/3 이상을 중국 연기자로 구성해야 하고, 영화의 후반작업과 현상작업 등을 중국 내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²³ 그리고 이렇게 제작된 합작영화는 중국전영합작제편공사의 공동제작영화 심의를 통과하는 경우 중국산 영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_ ICP 허가증은 중국 정부가 중국 내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업무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 인력, 사용자에게 장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용 및 능력, 완벽한 인터넷과 정보안전 보장조치 등을 조건으로 한다. 또한 <외상투자전신기업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또는 주주의 지분이 50% 이하인 기업에게만 ICP 허가증을 발급한다.

21_ 중국에서는 온라인게임서비스 종사 기업이 판호(ISBN)를 취득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중국 내에서는 <인터넷출판관리잠정규정>에 따라 인터넷출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판호를 취득해야 한다. <인터넷출판관리잠정규정>에 게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2009년 문화부와 신문출판총서 간 행정관할 분쟁과 관련하여 발표된 여러 법문서에 의거하여 게임 출판에도 판호를 취득할 것을 요구한다. 판호 발급은 중국산 30일 이내, 외국산 60일 이내로 제한되어 사실상 수입쿼터로 작용한다.

22_ 2012 중미간의 영화협정에 따라 수익배분방식의 20편 수입제한 이외에 미국영화 중 14편의 IMAX, 3D유형의 영화를 추가로 수입하도록 하였다.

23_ 해외에서 완성해야 하는 경우 광전중국의 기준을 얻어야 한다.

금융업

중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설립 및 영업 규제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회사)에 대해 내국인과 다른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에 따라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중국진출에 어려움이 있다. 실제 외국금융회사는 중국내 증권, 자산운용, 선물업 진출 시 사무소, 합자회사(지분 49% 이하) 형태로만 진출이 가능하고 독자설립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합자증권사도 설립 초기 중국의 내국주(A주) 브로커리지 업무에 제한(2년 경과 후 신청에 따른 허가)이 존재하는 등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설립 및 영업에 규제가 존재한다.

또한 투자자문회사 역시 일정요건 충족 시 라이선스 신청이 가능한 중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합자증권회사 설립을 통해 투자자문업에 대한 라이선스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차별적 제한이 있다. 한편 2007.12월 외국인의 중국선물회사에 대한 일부 지분참여가 허용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세칙의 미비로 실질적인 진출은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 장벽

자동차 투자기업에 대한 외자비율 제한 및 이행의무

중국은 자동차 완성차의 제조에 대해 2007.12.1일부터 시행되었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는 장려업종에 포함하고 외자비율 50%까지 허용한다는 제한을 두었으나, 2012.1.30일부터 시행된 신 목록에서는 별도의 외자비율 제한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자동차 완성차의 제조에 대해 합작투자요건과 외자비율 상한(50%)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 외에도 중국은 자동차 완성차를 제조하는 합자기업에게 공장신설시 신에너지차를 하나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으며, R&D 센터를 반드시 설립해야할 뿐만 아니라 R&D 인력의 중국인 의무고용(5% 이상) 요건을 부과한다.

그 외에도 중국은 완성차특징을 갖춘 자동차 부품 수입 관리 방법 제21조에 따라 자동차 완성차 제조 기업에 대해 수입 부품의 가격이 60% 이상을 차지하거나 완성차특징을 가진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서는 완성차의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중국의 부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외자기업에 대한 철강산업 투자제한

중국은 철강산업발전계획 제6장 제23조에 의거,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제선·제강 등의 사업을 할 때 지배주주가 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²⁴하고 있다. 또한 동 계획의 제6장 제23조 및 제3장 제10조에 따라 외국 철강기업의 중국 내 신규투자(설비신설)는 불허하고 중국 내 기존 철강회사의 합병 및 이전과 관련된 투자만 허용된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철강산업에 있어 신규 투자를 금지하고 제한된 형태의 투자(기존 기업의 합병 및 이전)만을 허용함은 물론 외국 기업이 지배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중국 내에서 외국 기업들의 사업 범위가 크게 제한되고, 투자를 시행한 이후에도 경영 전략의 수립·시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외자기업에 대한 석유화학 투자제한

중국은 2012.1.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에틸렌과 PVC 제조업을 제한업종으로 분류함에 따라 기투자자의 위험이 증대되고 신규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 정부는 2007.12.1일부터 시행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는 연간 생산능력 80만톤 이상 규모의 에틸렌 생산을 중국측 대주주 요건을 두어 장려업종으로 분류하였고, 연간 80만톤 이하 규모의 에틸렌 생산과 카바이드 PVC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부터 시행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에틸렌 후가공제품 생산’과 ‘아세틸렌법 폴리염화비닐(PVC)’이 제한업종에 포함되었다. 동 목록에서는 일정규모 이

24_ 중국 정부와 협상을 거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발표한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에 따르면 80만톤 이하 규모의 에틸렌 설비 신증설이 제한된다.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여타 국가에서 발표되고 있는 투자 Negative List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각 국가들은 외국인투자자에게 설립전·설립후 단계의 투자 제한 여부를 투자 Negative List를 통해 알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의 투자 자유화(자발적 자유화) 수준에서 후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별도의 투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던 일정규모 이하의 에틸렌 후가공제품 생산과 아세틸렌법 PVC 생산을 제한업종으로 분류함에 따라 중국에서 이들 업종에 신규 투자를 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선박금융 지원 차별

중국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2.1.30일부터 시행)에서 선박과 해양 구조물 및 그 부품을 장려류에 포함²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조선업체와 외자 조선업체를 차별하는 금융지원 제도를 두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정부는 중국 조선업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금융지원을 하지만, 외자 조선업체에 대해서는 선수금환급보증(RG)제도에 있어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제작금융 대출조건도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조선소의 중방 지분은 51%이나 실질적으로는 67%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적에 따른 금융지원상의 차별은 외자조선업체의 사업을 어렵게

25.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2년 1월 30일부터 시행)에서 장려형 외상투자산업 목록의 III. 제조업 중 (19) 교통운송설비제조업에는 18. 호화 여객선 및 심수(3,000미터 이상) 해양공정 장비의 설계(합자, 합작에 국한), 19. 해양공정장비(모듈 포함)의 제조와 수리(중국측 지분 통제), 20. 선박의 저속, 중속 디젤엔진 및 그 부품의 설계(합자, 합작에 국한), 21. 선박의 저속, 중속 디젤엔진 및 크랭크축의 제조(중국측이 지분 통제), 22. 선박 선실 기계의 설계 및 제조(중국측이 상대적인 지분 통제), 23. 선박 통신 네비게이션 설비의 설계 및 제조, 선박 통신시스템 설비 및 선박 전자 네비게이션 설비, 선박용 레이더, 자동 방향타 및 선박내부 공공방송시스템 등, 24. 유람선의 설계와 제조(합자, 합작에 국한)가 포함되어 있다.

만들고 있다.

금융상의 제약

중국에서 외국인투자자가 과실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① 과실 발생연도의 회사 회계감사보고서의 작성, ② 회사의 과실상황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의 작성, ③ 회사 소재지 세무기관에 납세증명서 및 세무신고서를 신청한 다음 ④ 이들 서류를 지정된 외환송금은행에 제출하고, ⑤ 은행에서 제출서류의 진실성을 확인한 이후에야 ⑥ 은행송금이 이루어진다. 이때 외상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이 규정에 따라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해외 과실송금은 불가능하며 상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세무 및 외환당국의 허가 지연 등으로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다.

기타

증치세 부과기준 및 환급절차

중국 정부는 2012.7.1일부터 수출상품에 대한 증치세 환급기간을 기존 “수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수출일로부터 그 다음해 4.30까지”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수출상품 증치세 환급기간의 과도한 연장은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업자는 조기환급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고, 환급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관세청이 해당하는 이자를 지불하여 보상한다. 한편, 중국 정부는 매년 품목별 증치세 환급율을 발표·시행하고 있는데 통관하는 세관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동일하지만 동일 품목에 적용되는 환급율이 상이한 경우가 많다.

까다로운 외국인 취업비자(Z비자) 발급요건

중국은 <재중외국인취업관리규정>, <외국인출입국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관법>에 따라 외국인 취업비자(Z비자)와 외국인 주재원 비

자 등을 발급·관리하고 있다.

중국에서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재중외국인취업관리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²⁶를 갖추어 외국인 취업허가 신청을 하고 중국 당국으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취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중국 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은 학력요건(대졸 이상)과 전문지식충족요건(근무경력 2년 이상)을 충족한다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으로 인해 학력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요리사, 미용사 등은 중국에서 외국인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으며,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외국인 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 졸업 후 해외에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업들이 그런 인력을 채용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 외에도 중국 정부는 만 60세 이상인 외국인(전문직 포함)에게는 취업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아 중국내에서 기업들이 외국의 은퇴한 기술자나 전문직 인력을 활용하기 어렵고, 외국인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이 외국에 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출입국 절차 외에 별도로 24시간 이내에 중국 정부에 신고해야하는 불편이 있으며, 주재원 비자 수속 시 ‘안전 보장 각서’를 쓰도록 하는 문제가 있다.

26_ 중국에서 외국인 취업허가증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건강진단서, 졸업증명서, 중문이력서, 2년 이상의 경력증명서, 기업영업집조, 비준증서, 회사공장 등이 있다.

인도네시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상품 무역은 한·ASEAN FTA가 발효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2.1배 증가하여 2011년 30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에는 296억 달러로 다소 감소하였다. 2012년 기준 대인도네시아 상품 수출입은 각각 140억 달러와 15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적자이다.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목은 광산물(39.6%), 철강제품(14.4%), 화학공업제품(12.6%), 기계류(11.8%)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광산물(73.9%)과 농림수산물(7.0%) 등이다.

한·인도네시아 투자관계에서 우리나라의 IFDI 유치액(1962~2013.9월 누적치, 신고금액 기준) 중 인도네시아가 투자한 금액은 9.6억 달러로 전체 IFDI 유치금액 중 0.4%에 불과하며, 투자 분야도 부동산·임대에 집중(88.7%)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OFDI(1968~2013.9월 누적치, 실투자금액 기준)는 70억 달러로 전체 OFDI 중 3.0%를 차지하며, 제조업(53.3%)과 광업(24.8%)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에는 2007년 한·ASEAN FTA가 발효(상품협정)²⁷되었으며, 2013년 현재 한·인도네시아 CEPA(2012.3월 협상 개시), RCEP(2012.11월 협상 개시) 등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27_ 서비스 및 투자 협정은 각각 2009년 5월 및 9월에 발효되었다.

수출통제

목재 수출규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불법벌채와 도벌 등을 방지하고자 1985년부터 목재의 수출을 규제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²⁸ 2012.8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목제품에 합법적인 목재인증제(SVLK: Timber legality Verification System) 획득을 의무화함에 따라 SVLK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만이 목재의 내수 판매 및 수출이 허용되는데, 인도네시아 조림사업에 투자한 외국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 규제에 적용받는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조림 사업에 투자한 외국 기업이 SVLK 인증을 획득하더라도 생산된 목재를 모국이나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인도네시아 정부에 고율의 수출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원광석 수출금지 및 수출세 부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광물 및 석탄 광업에 관한 법률 2009년 제4호 및 에너지 광물자원장관령 2012년 제7호, 재무부령 2012년 제75호에 따라 원광석의 수출을 규제한다. 2012.5.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원광석의 수출 제한 조치에 따르면 금속 14개, 비금속 8개, 기타 19개 등 총 41개 광종의 미가공 광물(단, 석탄 제외)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정제·가공 없이 수출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2014.1.12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일정한 선결조건(①보유 광업권(IUP)이 중앙정부가 인정한 Clean and Clear Status 일 것, ②재무적 이행사항 및 세금 완납 증명, ③2014년부터 더 이상 원광을 수출하지 않겠다는 각서, ④수출세 부담, ⑤광물 수출 할당량과 기간)을 이행하는 경

28_ 인도네시아에서는 1985년 원목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1989년에는 저가 제재목의 수출을 금지하고 고율(250~4,800\$/m³)의 수출세를 부과하였고, 1992년에는 원목의 수출 금지 조치가 해제되었지만 고율(500~4,800\$/m³)의 수출세를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수출이 어렵게 되었다. 2001년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원목의 수출 금지 조치를 다시 시행하였으며, 2006년에는 철도용 침목과 6mm 이상 제재목의 수출을 금지하였다.

우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원광석 수출규제 조치는 인도네시아 자원보호 및 국내시장 가격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광물 생산수출업체는 '14년까지 제련소를 건설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어 수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광업법 시행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도 관련 업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리고 2012.5.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출세 부과 조치에 따르면 석탄을 제외한 총 65개 광종(금속 21개, 비금속 10개, 기타 34개)에 대해 수출시 20%의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입규제

전자제품(핸드폰 및 핸드헬드/테블릿 PC) 수입규제

인도네시아는 핸드폰, 핸드헬드/테블릿 PC²⁹의 불법수입 근절을 위해 수입업자는 무역부로부터 수입 라이선스를 사전에 취득한 후, 수입품목에 대해 산업부의 등록허가(TPP: Tanda Pendaftar Produk Impor)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로부터는 통신장비인증서를 받아야 하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레이블링, 설명서, 보증서 등은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여 무역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입은 정부가 지정한 항구와 공항³⁰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조치로 인해 우리기업의 통관지연(그간 우선통관 절차를 통한 혜택으로 선적과 통관에 5일 정도 소요되었으나, 동 조치(최소 22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29_ HS 8517120000, HS 8471301000, HS 8471309000

30_ 공항: Polonia(Medan), Soekarno-Hatta(Tangerang), Ahmad Yani(Semarang), Juanda(Surabaya) and Hasanuddin(Makassar), 항구: Belawan(Medan), Tanjung Priok(Jakarta), Tanjung Emas(Semarang), Tanjung Perak(Surabaya), Soekarno Hatta(Makassar)

수입자인증번호(API)

인도네시아는 수입목적에 따라 일반수입자(API-U)와 생산용수입자(API-P)를 구분하여, 수입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한다. 수입자 인증번호제도(API: Angka Pengenal Importir)규정은 2012.5월 처음 발표(무역부장관령 No.27/2012) 되었으며, 2012.9월에 개정되었다. 개정 전, 일반수입자(API-U) 법인은 1개의 수입상품 코드만 수입이 가능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①API-U 보유사가 특수관계³¹를 가진 외국회사로부터 수입시, 해당 외국회사와의 특수관계 증빙서류를 주재국 인도네시아 공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거나, ②인도네시아 정부가 전체 또는 일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수출사와 특수관계가 없어도 여타권 품목의 수입이 가능하다. 생산 용수입자(API-P)의 경우, 개정 전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화시제품(market testing goods) 또는 보완재(complimentary goods) 등의 재화만 수입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보완재에 대해서는 자사생산 불가능 조건을 삭제하여 수입가능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관련 비즈니스 라이선스 분야의 제품으로 한정, 수출사와 특수관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규정 개정으로 제도가 일부 개선은 되었으나, 여전히 수입을 위한 복수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의적 제도 운영으로 인한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자등수입허가절차

인도네시아는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등 총 97개 품목에 대한 수입라이선스 발급을 강화하고 있다. 해당품목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조식품의 총 97개 품목으로 무역부가 정한 항구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다. 선정된 등록수입자의 경우, 시행령상 일정한 요건을 면제해 주기도 하나, 등록수입자로서 자격승인 절차가 모호하고 부정확하여 차별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다.

31_ 경제활동 통제를 공유하기로 계약, 소유권 공유, 기업결탁, 위탁계약 또는 유통계약, 자금대여 계약, 공급자 계약

특히, 원예작물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농업부로부터 원예작물 수입권고(Horticulture Product Import Certificate: RIPH)를 받은 수입자만 원예작물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자는 통상부에 원예작물에 대한 등록된 수입자 또는 원예작물의 생산, 수입자로 지정, 신청해야 한다. 또한 수입자는 개별 수입제품에 대해 RIPH증명서와 수입자지정을 제출하여 수입허가/승인을 통상부에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원예작물에 대한 비자동적 수입허가제는 해당 물품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을 불공정하고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수입제한

수입 주류에 대한 수량제한

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해서 수입 수량제한을 부과하고 있는데, 수입업자들은 지정 주류 수입자로 신청·등록해야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정한 연간쿼터 한도 내에서 수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연간 쿼터로 인해 수입제한 효과를 초래하고, 운영방식이 투명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통관

선적전 검사로 인한 통관 지연

인도네시아는 국내법인 무역부장관령 No.19/2008, No.05/2005에 따라 일부 지정 품목에 대해 수입자의 비용 부담으로 지정된 검사기관(PT Surveyor Indonesia 또는 Sucofindo)에 의한 선적전 물품 확인(pre-shipment verification) 요건 부과하고 있다. 선적전 검사 대상 품목은 설탕, 쌀, 소금, 광학디스크(공CD 포함) 및 CD생산장치, 섬유, 오존소모제품, 칼라프린터·복사기, 비위험 및 독성 물질, 중고재, 철강, 일부 전자제품, 기성복, 장난감, 신발, 식품·음료, 세라믹, 판유리, 타이어, 진주, 원예농산물 등이

있다.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과 관련해서는 섬유류 및 식품류 등 7개 수입 상품군(유제품, Nitro Cellulose, 쌀, 소금, Pre Cursor, 설탕, 광학디스크)이 인도네시아의 선적전 확인 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선적전 검사는 관세 포탈을 위한 부정 수입이나 밀수 등 비정상적·불법적인 수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WTO 선적전검사협정상 허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선적전 검사의 본래 취지를 넘어 과도하게 운영하는 측면이 있어, 통관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과 지정된 선적전 검사 기관에 의한 운영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수입 신선 농산물 통관항구 규제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자국 농산물 보호를 위해 2012.9월부터 신선원예농산물의 통관 항구를 종전 8개 항구에서 1개 공항 및 3개 항구³²로 축소하고 검사 강화 및 쿼터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이 수라바야 항구 이용할 경우 자카르타까지 육로로 약 2일이 소요되며, 냉장운송에 따른 운송비가 약 2~3배 가중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국가인정협정(Country Recognition Agreement; CRA)을 통해 과실파리 무발생을 인정받은 국가에 대해서는 판중프릭옥 항구 통관을 허용하고 수입검역을 간소화하는 예외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가인정협정(CRA)은 수입국의 식품 안전 시스템이 인도네시아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검증 절차를 거쳐, 합의된 농산물에 대해 식품 안전 요구조건에 대한 전체 검사 절차를 면제하는 특혜 협정을 말한다.

우리 정부도 자카르타 항구 이용 및 통관 검사 간소화를 위해 對인니 주된 수출품인 국산 배 품목의 CRA 획득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신선농산물의 통관 어려움으로 가공품 위주(조미 김, 김치 등)로 인니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32_ 통관 가능 공항 및 항구: 자카르타(수카르노 하마 공항), 수라바야(Tanjung Perak 항구), 메단(Belawan 항구), 마카사르(수카르노 하마 항구)

정부조달

정부조달 관련 자국기업 우대 및 불투명한 제도

인도네시아는 외국기업이 자국의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인니기업과의 제휴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정부조달시장을 대외적으로 개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인니는 자국기업들의 정부조달 참여를 우선시 할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을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조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지기업(기업 지분의 51% 이상을 인도네시아 국적자 또는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또는 지방정부가 소유한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고, 자국산 제품을 40%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의 모든 국가기관은 자국산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국산 제품 및 공급자들에 대해 가격차원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전자조달 도입 및 확대로 절차상의 투명성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전체적인 차원에서 절차적 투명성 역시 개선해야 할 여지가 큰 상황이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 정부조달시장은 폐쇄적이고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회원국이 아니며, FTA등을 통해 국내시장 개방 및 투명성 제고에 대한 의무를 약속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니측의 이러한 자국 제품 우대관행을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여지는 없는 상황이다.

투자

과도한 외국인투자 제한조치

인도네시아는 자국 산업 보호 등 다양한 목적에서 투자 Negative List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는 2010년 투자제한규정(대통령령 No.36/2010)이 적용되고 있다. 2010년 인도네시아 투자 Negative List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업종을 농업·임업·문

화관광·통신정보·금융 등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외국인·외국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를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방송국(라디오, TV), 전화/인터넷 키오스크 및 가정/건물 케이블 설치 등은 국내 중소기업 전용 업종, 통신탑 건설/운영, 신문사, 사설 방송국(LBS) 및 청약제 방송국(LPB)의 경우 100% 국내자본으로 제한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하에서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는 통신망 서비스(49%까지 외국인 지분허용³³), 멀티미디어/인터넷 서비스 제공(ISP)(49%까지 외국인 지분허용³⁴), 메일 서비스(49%까지 외국인 지분허용), 통신기 검사업(95%까지 외국인 지분허용) 등이다.

현재 2010년 투자 Negative List 개정을 위한 국내 절차가 진행 중인데, 통신서비스 등 일부 분야³⁵에서 외국인 투자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타

사치세 부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치품(luxury goods)에 대해 매우 높은 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사치세를 도입³⁶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품목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치품을 ‘생필품으로

33_ 세부적으로 고정망은 49%, 폐쇄 고정망은 65%, 핸드폰 네트워크는 65%까지 지분 허용

34_ 세부적으로 데이터 통신 서비스는 95%, 인터넷 전화 서비스는 49%, 인터넷 연결 서비스(NAP)는 65%, 기타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49%까지 지분 허용

35_ 현재까지 알려진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제한이 완화되는 주요 업종은 공항/항만(외국인투자 최대지분률 : 기존 0% ⇒ 개정안 100%), 영화배급(외국인투자 최대지분률 : 기존 0% ⇒ 개정안 49%), 광고(외국인투자 최대지분률 : 기존 0% ⇒ 개정안 51%), 제약(외국인투자 최대지분률 : 기존 75% ⇒ 개정안 85%), 관광(외국인투자 최대지분률 : 기존 49% ⇒ 개정안 70%), 통신(외국인투자 최대지분률 : 기존 45% ⇒ 개정안 65%) 등이다.

36_ 재무부장관령 2012년 제27호.

간주되지 아니하는 제품'으로 정의하고 광범위한 제품에 대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배기량 1,500cc 이하의 자동차에 10~30%의 사치세가 부과된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대부분은 1,500cc 미만 승용차로, 1,500cc 미만 승용차에 대해서는 10% 세율이 적용되어 3,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세단 및 스테이션 왜건)와 2,500cc를 초과하는 디젤 자동차(세단 및 스테이션 왜건)등에 부과되는 75%의 사치세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동차 외에도 가정용품, 냉장고, TV, 에어컨, 식기세척기, 비디오, 캠코더, 향수, 선박, 요트, 항공기, 모피 소재 카펫, 악기, 주류, 피혁·합성피혁제품, 가죽류, 가구류, 도기제품 등 매우 다양한 품목에 사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운영과 품목 선정 과정이 복잡하고 불균형적이라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베트남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를 한 이후 양국간 상품 무역이 1992년 4.9억 달러에서 2012년 216.7억 달러로 연평균 20.8% 증가하였으며, 한·ASEAN FTA가 발효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양국간의 상품 무역은 약 3.0배 증가하였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상품 수출입액은 각각 159억 달러와 5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02억 달러 흑자이다.³⁷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전기전자(36.3%), 섬유류(13.1%), 철강 금속제품(13.0%), 화학공업제품(12.8%), 기계류(11.1%)이고, 주요 수입품목은 섬유류(29.2%), 농림수산물(19.8%), 광산물(18.7%), 전기전자(12.0%) 등이다.

베트남의 대한국 투자는 매우 미미³⁸한 반면,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제5대 OFDI 대상국이다. 1968~2013.9월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OFDI 누적액은 실태투자금액 기준으로 91.7억 달러(전체 OFDI에서 4.0%를 차지)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55.0%)³⁹과 광업(18.2%)이고 서비스업에서는 부동산·임대(8.8%), 건설업(5.4%)에 대한 투자가 많이 시행되었다.

한국과 베트남간에는 한·ASEAN FTA가 발효된 상태이며, 현재 한·베트남 FTA(2012.8월 협상 개시)와 RCEP 등이 추진중이다.

37_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상품 수출입에서 대베트남 상품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9%, 1.1%이다.

38_ 1962~2013년 9월 누적치(신고금액 기준)가 1,380만 달러에 불과하다.

39_ 제조업 주요 투자 업종은 섬유류(17.4%), 전기전자(11.3%), 1차금속(8.2%) 등이다. 비중은 전체 투자액 중에서 각각의 업종에 대한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수입규제

자동차 수입허가제

현재 베트남은 외국산 자동차(HS 8703, 9인승 이하 차량)의 수입에 있어 반드시 해외 자동차 생산자가 공인하는 딜러에 의해서만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인딜러들은 베트남 정부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과거에 베트남에 자동차를 수입했던 딜러들은 베트남 정부가 요구하는 해외자동차 생산기업의 딜러인증 관련서류 획득 절차가 매우 어려워, 이러한 제도가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베트남 자동차공업협회(VAMA)는 이 규정의 지속적인 시행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협회는 이 법안 폐지 시 현지 자동차 생산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은 물론,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국들은 베트남의 자동차 수입허가제 규정이 수출·투자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시장접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수입 철강제품 사전등록

베트남은 자국법Circular 23/2012/TT-BTC에 따라 2012.9.20일부터 모든 수입철강제품(72류, 73류)에 사전 산업무역부 등록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수출, 투자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대베트남 철강수출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통관

HS 코드 세부분류 비일관성으로 인한 애로

베트남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은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시설재 및 원부자재의 수입의 시 베트남 세관/세관원의 자의적인 수입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컨대 베트남 내 검사기관에서 작성한 품목

분석보고서를 첨부하여 HS코드 분류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관세청 본청에서 수개월간 회신이 없거나 담당세관이나 직원에 따라 다른 HS코드로 분류되기도 한다. 현재 약 3,000여 개의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생산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다양한 원부자재 수입이 필요한 바, HS 코드의 비분류로 인해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원산지규정

FTA 원산지증명서 인정 애로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우리나라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상공회의소에서만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한·ASEAN FTA 규정에서 원산지 발급기관은 회원국의 소관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세관은 발급기관이 다르다며 우리 세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원산지증명서의 직인색깔, 포장단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원산지증명서 직인이 파란색인 경우가 많으나, 베트남은 대부분 빨간색 도장을 사용하여 세관원에 따라서 직인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증명서 인정이 거부되기도 한다. 또한 인보이스상의 포장단위와 원산지 증명서상의 포장단위가 상이한 경우 총 수량이 동일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베트남 정부의 과도한 관세 부과 가능성, 관세부담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이의제기 및 시정을 위한 부가적인 비용 부담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조달

건설 입찰에서 차별적 관행

베트남 정부조달 시장은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존재한다. 베트남

은 정부조달시 오직 자국산 물품이 조건에 맞지 않거나, 자국 내에 물품이 생산되지 않는 경우에만 국제입찰을 시행한다. 또한 입찰과정이 지연되고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 프로젝트 발주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만 물품 공급계약 낙찰을 받을 수 있다. 2003년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정부예산을 활용하는 컨설턴트 선정 입찰의 경우 반드시 베트남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도 현지업체 또는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가격 심사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화장품

중저가 화장품의 경우 고객의 요구와 최신 유행을 반영하기 위해 수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속 신제품을 출시해야 한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제품 등록에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⁴⁰ 일반적으로 화장품은 각국 식약청에 개별 등록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 판매 제품을 해외시장에 얼마나 빨리 출시하느냐가 수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등록이 지연될 경우 국내에서는 단종 된 모델을 해외로 판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베트남 세관은 무역수지 악화 요인이며 자국민들에게 잠재 수요가 높은 고가의 화장품 등 고가제품에 대한 통관 규정 강화와 세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위생 및 식물 검역조치(SPS)

식품별 검역기준 미흡

40_ 여타 국가에서는 통상적인 등록기간이 1개월 내외인데 반해 베트남에서는 등록에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베트남은 식품종류별 검역기준이 미비하며, 일반식품 기준으로 한국의 전통식품(발효식품)⁴¹에 대한 검사를 실시, 지속적인 부적합 판결을 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베트남은 발효식품에 대한 검역기준이 없는데다가 한국의 발효식품 등에 대한 샘플링 시기를 늦추는 등 고의적인 부적합 결과를 유도하고 있다. 발효식품은 온도에 쉽게 변질되기 쉬워 샘플링 시기와 장소가 중요함에도 업무과다를 이유로 샘플접수 후 10일 이후에 검사를 실시하는 사례도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전통식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빈번해 수출에 어려움이 많다.

경쟁정책

외국기업과 농민간 농산물 직거래 전면 금지

베트남은 자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농산물 거래 시, 농민과의 직거래를 규제하고 반드시 베트남 중간 유통상을 통해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국의 농산물 시장과 자금력이 부족한 자국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조치이다. 이러한 규제는 농산물 시장의 합리적인 가격형성을 저해하여 외국기업,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준다.

투자

유통업, 외국계 기업의 수입업 투자 허가서 발급지연 및 유통제한

베트남은 2011.9월에 시행된 수상령⁴²에 근거하여 외국계 기업에 대해 수입업 허가를 해 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며, 허가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베트남 투자계획국(DPI)의 관련 부서(10개 이상)와 합의가 있어야 하고, 제출

⁴¹ 2005.99.1000(김치), 2103.90.1030(고추장).

⁴² 동 수상령은 다음과 같다. “To restrict investment projects in the non-manufacturing sector and those increasing trade deficit.”

서류가 복잡할뿐만 아니라 발급기간이 1~2년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외국 기업은 상품의 수입 허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 면허에 유통할 권리까지 명기되어 있어야만 해당 상품의 베트남 내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통 권리가 없는 외국 기업은 베트남 대리인이나 베트남 유통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정부 인가를 받은 제3자 창고업자를 이용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요건은 베트남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소매업 관련 허가 규정 불명확

베트남 정부가 2013년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⁴³함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매업자⁴⁴는 경제적 수요평가(ENT)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ENT의 실제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소매점포 개설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아 법의 자의적인 해석 및 적용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편 ENT 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소매업 투자의 경우 경제적 수요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대표자 선정기준이나 심사과정 및 소요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의약품 수입 및 유통 제한

베트남 정부는 미국 FDA 및 유럽의약품청의 엄격한 기준을 차용한 관련 법(Circular 03/2012/TT-BYT)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새로운 화학물 또는 의약품을 등록할 때 해당 제품이 원산지국가에서 사용 된지 5년 이내 일 경우 베트남에서 임상실험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Circular 47/2010/TT-BYT 및 APPENDIX에 의거하여 사람에게 약으로 처방되는 성분 중 178가지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Law ON PHARMACY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은 자사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의약품 사업조건

43_ 시행규칙 8(Circular No.08/2013/TT-BCT).

44_ 500㎡ 이하 소매점, 성이나 직할시에 의해 상거래 활동지역으로 계획된 지역, 매장 건물의 기반 시설이 완비된 경우로 제한된다.

에 관한 충분한 증명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은 베트남의 법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 기업의 의약품 수입 및 유통이 제한되고 있다.⁴⁵

⁴⁵_ WTO TPR 보고서(2013년 8월).

말레이시아

한·말레이시아간 상품 무역은 2000년대 초반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는 정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2년 기준 양국간 상품 무역액은 175억 달러로 전년대비 4.6%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대말레이시아 상품 수출입액은 각각 77억 달러와 98억 달러이며, 무역수지는 21억 달러 적자이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말레이시아 주요 수출품목은 전기전자(25.5%), 광산물(20.6%), 철강금속제품(16.9%), 기계류(16.8%), 화학공업제품(15.5%)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광산물(43.7%), 전기전자(25.2%), 농림수산물(10.0%) 등이다.

말레이시아의 대한국 투자(1962~2013.9월 누적액, 신고금액 기준)는 총 75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IFDI 유치액에서 3.5%를 차지하며,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보험(34.2%), 유통(9.3%), 전기전자(9.0%), 부동산·임대(6.9%) 등이다. 우리나라의 대말레이시아 OFDI는 1968~2013.9월 누적액(실투자액) 기준 43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OFDI에서 1.8%를 차지하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50.0%)과 광업(31.9%)이다.

한국과 말레이시아간에는 한·ASEAN FTA가 발효된 상태이며, 2013년 현재 RCEP 협상이 추진중이고 양국간 FTA에 대한 타당성 연구가 완료된 상태이다.

수출통제

팜원유에 대한 수출세 부과

말레이시아는 원자재의 단순 수출을 억제하면서 원자재 가공 산업을 육성

하기 위해 팜원유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⁴⁶ 팜원유에 대한 수출세 부과 기준이 되는 톤당 가격과 수출세율은 매월 고시되고 있는데, 2013년 기준 수출세 부과 최소 가격은 2,250달러/톤이며, 이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 가격대에 따라 4.5~8.5%까지의 수출세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팜원유 수출세 부과로 인해 팜원유를 수입해 사용하는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수입규제

자동차 수입허가제

말레이시아는 자동차⁴⁷를 수입할 경우 Import License(AP: Approved Permit)를 요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입 면허를 발급하는데, 특정 조건은 △기존의 완성차 수입을 위한 AP 할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완성차 업체의 프랜차이즈, △반제품 자동차 현지 조립업체, △클래식 자동차 및 고전 자동차 수입, △연구개발, 전시회, 자동차 경주대회 출전을 위한 수입 등의 조건을 말한다. 또한 AP는 연간 신규차량 등록대수의 10%선으로 제한되어 연간 5~6만대 정도가 허용되고 있다. AP는 제1차 국가자동차정책(NAP)에서 철폐하기로 시한을 발표했으나, 2차 NAP에서 철폐기간을 연장(Open AP(중고차용) 2015년, Franchise AP 2020년)하였다.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AP 제도는 일종의 수입할당제로 대말레이시아 자동차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광범위한 수입허가제도

말레이시아에서 통제상업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허가면허(Import Permit License)가 필요한데, 이 품목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양국간 무역할

46_ 관세법1967과 관세법령(팜오일 가치)2013에 의거함.

47_ HS 품목코드 8704.10 211, 8704.10 212, 8704.10 311, 8704.10 312, 8704.23 210, 8704.23 220, 8704.32 210, 8704.32 220, 8704.90 210, 8704.90 220

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통제산업물품에는 식품(food products), 중장비(heavy machineries), 복사기(photocopy machines), CD제조기(compact disc makers), 마그네틱테이프(magnetic tapes), 철(iron steel) 등 총 33개 품목군이 해당된다. 수입허가면허는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기업만 취득할 수 있어 국외소재 기업은 취득을 할 수 없고, 수입허가면허의 취득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품목마다 달라 취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말레이시아의 수입허가제도는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비자동수입허가요건을 내포하고 있고, 품목마다 제출서류가 달라 대상제품의 원활한 교역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관련 외국인 입찰 참여 제한

말레이시아는 자국 산업의 발전과 말레이계 기업 육성을 위해 자국기업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 구매 제도’에서는 자국의 소재 및 자원 이용을 극대화 하여 자국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 부미푸트라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할 것을 명문화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재무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현지 업체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의 건설산업개발위원회가 발행하는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건설업 면허는 현지인 지분 70%이상인 기업에만 발행하고 있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도 현지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입찰 및 낙찰과정도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경제변혁프로그램(ETP)을 추진함에 따라 말레이시아 건설시장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자국기업 우대 정책과 불투명한 조달체제로 인해 말레이시아 현지 입찰 참여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현지기업만 가능한 Petronas 벤더 등록

말레이시아 Petronas(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의 공급 업체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현지기업을 파트너로 발굴하거나 말레이시아 지분이 포함된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 외국기업은 현지기업을 에이전트로 지정하고 이 에이전트가 Petronas에 벤더로 등록되거나 Petronas로부터 제품 납품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후자의 경우 외국기업은 현지기업과 합작투자 법인을 설립하여 벤더로 등록하거나 라이선스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품목별 서비스별로 말레이계 지분 참여율이 정해져 있어 외국기업 참여가 가능한 분야는 매우 제한적이다.

투자

유통업 사업면허 발급 지연

말레이시아에서 외국기업이 유통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소매·무역업 면허(WRT license)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동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납입 자본금요건(100만 링깃(약 3.2억원))을 충족해야 하고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외국 기업이 면허 취득 과정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취득 절차가 복잡하다.

또한 외국 기업이 말레이시아 WRT 면허를 신청할 때 말레이계 지분의 참여가 낮다는 이유로 면허의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외국 기업에게 5,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유통매장 운영 면허를 발급할 때 말레이계 지분율이 30%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

인도

2012년 기준 한·인도 상품 무역액은 188억 달러이며,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입액은 각각 119억 달러와 69억 달러(총 상품 수출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2%, 1.3%)이며, 상품 무역수지는 50억 달러 흑자이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인도 주요 수출품목은 기계류(32.6%), 화학공업제품(23.1%), 철강금속제품(19.0%), 전기전자(14.2%) 등이고, 주요 수입품목은 광산물(58.2%)과 철강금속제품(12.0%), 화학공업제품(9.9%), 농림수산물(9.7%) 등이다.

인도의 대한민국 투자는 1962년부터 2013.9월까지의 누적액(신고금액 기준)이 약 6억 달러(전체 IFDI 중 0.3%)이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OFDI는 1968년부터 2013.9월까지의 누적액(실투자액 기준)이 약 29억 달러(전체 OFDI 중 1.3%)이고, 이 중 제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84.9%(제조업 주요 투자업종은 운송기기(39.1%)와 1차금속(21.2%))에 이른다.

한·인도간 CEPA가 2010.1월부터 발효되었으며, 2013년 현재 RCEP 협상에 양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수입규제

중고자동차 수입규제

인도는 중고차량 수입 시, 중고차량의 연수가 제조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고, 운전자석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륜차 및 삼륜차를 제외하고 모든 중고차량의 운전자석은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자동차 내 미터기는 킬로미터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중고차량 수입은 모두 뭄바이 세관(Customs Port at Mumbai)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자동차배기량이 3,000cc를 넘어서야 한다(중고차량 1000~2500cc 전면 수입금지, 이륜차의 경우 스쿠터는 50~500cc 수입가능, 모터 사이클은 250cc 이상 수입가능하나 800cc를 초과할 수 없음). 특히 중고차량을 인도로 수출할 경우, 별도의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수출 및 선적 전에 완료해야 한다. 동 법안으로 인해 중고차량을 인도로 수출하기 위해 시장조사를 하던 기업들은 복잡한 규제와 절차 등으로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수출이 전무한 상태이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의료기기

일부 의료기기⁴⁸를 인도 내에서 제조 및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약품 표준 통제국(CDSCO: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으로부터 의료기기 등록증을 취득해야 하며, 관련 상품의 부품을 수입할 경우에도 등록증이 필요하다. 이때 상기 제품이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호주 등에서 판매되지 않는 경우 등록증 발급 신청에 제한이 존재한다. 즉, 이들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으나 제품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발급 신청이 가능하나, 이들 국가에서 판매 및 등록이 모두 되지 않은 경우 CDSCO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상실험을 통해 검증을 받은 후에야 등록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등록증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48_ ①Disposable Hypodermic Syringes, ②Disposable Hypodermic Needles, ③Disposable Perfusion Sets, ④In-vitro Diagnostic Devices for HIV, HbsAg and HCV, ⑤Cardiac Stents, ⑥Drug Eluting Stents, ⑦Catheters, ⑧Intra Ocular Lenses, ⑨I.V. Cannulae, ⑩Bone Cements, ⑪Heart Valves, ⑫Scalp Vein Set, ⑬Orthopaedic Implants, ⑭Internal Prosthetic Replacements 등

실제 발급기간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9개월 정도가, 신청비용은 1천 달러 정도가 소요되며 제품별로 각각 신청 및 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등록을 위해 필요한 기타 서류의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등록증 발급 이후 제품 사용용도 변경 및 확대, 에이전트, 수입 및 공급업체 주소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3개월 내 CDSCO에 통지 또는 재등록이 필요하고,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장신청은 만료 9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는 등 등록에 대한 규정이 복잡한 것 역시 애로사항이다.

화장품 등록

화장품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입을 관리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도로 수입되는 스킨, 헤어, 네일 등 모든 화장품 역시 2013. 4월부터 CDSCO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등록절차가 까다로와 대인도 제품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수입되는 제품이 인도 현지에서 재포장 또는 재가공 되어 해외로 100% 재수출 되는 경우 해당 의무 등록 절차는 면제되나, 제품을 수입하여 재포장 한 후 현지 시장에 판매할 경우에는 의무 등록이 필요하다.

현지에 법인, 연락사무소, 지사 등이 있는 해외업체의 경우 직접 CDSCO에 등록이 가능하나 인도 내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해외업체의 경우 수입업자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이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품목별로 각각 신청해야 하고 1회 등록 시 2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승인 발급 기간은 약 30일 정도 소요된다. 이외 수입업자나 에이전트를 교체할 경우 새로운 수입업자 또는 에이전트가 CDSCO에 신고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고 연장신청은 만료 9개월 전에 해야 한다.

철강제품

2012.9월부터 일부 철강제품⁴⁹을 인도에 판매(수출)하기 위해서는 표준국

49_ BIS 인증번호가 2002, 2041, 2830, 1786, 648, 15391, 2062에 해당하는 철강 제품

의 BIS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인도에 유통 및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품질, 안전,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 및 수입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BIS 인증을 직접 받기 위해서는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등을 인도에 설립하는 등 인도시장에 진출한 이후에 가능하다. 이외 현지 수입업자를 통해 BIS 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해당 현지 업체가 정식으로 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 업체와의 법적 계약 관계가 계약서 등을 통해 명확히 증명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신청 → 검토 → 공장방문(설비조사) → 샘플 테스트 → 인증서 발급의 순으로 진행되는 인증서 발급은 일반적으로 10개월이 소요되어 발급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인증서 발급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승강기

델리 주정부는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평명 에스컬레이터와 보도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델리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법(Delhi Lifts and Escalators Bill 2013) 초안을 승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인도 연방정부와 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 법안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뭄바이 승강기법(Bombay Lifts Act, 1939)보다 더욱 엄격한 안전 검사 및 증명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나 자세한 내용은 인도 정부에서 초안을 공개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델리 소재 모든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가 해당되며 건물주는 기존 1~3년 기간으로 발급되던 승강기 관련 라이선스를 매년 갱신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 및 상가의 건물주는 사용자를 위한 제3자(기술자, 노동자 제외)를 통한 보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건물 또는 상가의 건물주는 수감 또는 10만 루피의 벌금에 처하며 위반 여부에 따라 두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위반 일수마다 5천 루피의 벌금

이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이외 일반 사유지, 거주 건물의 경우는 위반 항목 당 1만 루피의 벌금이 부과되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마다 최대 500루피의 벌금이 부과된다.

텔레콤 네트워크

인도에서 수입 통신기기의 소프트웨어에 대해 버그, 악성코드 등의 탑재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2005년에 발효되었던 Unified Access Services Licence(2005.12.14) 법안을 수정 및 보완한 법안이 2011.5월에 통과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2013.4월부터 수입하는 모든 휴대폰 및 관련 기기, 부품, 소프트웨어, 제조 시설 등을 인도 내의 공인된 검증 기관 및 DoT 또는 DoT의 에이전트로부터 보안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도 내 관련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법안 시행이 불가능하여 시행 일자를 10.1일로 연기하였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공고 및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통신서비스사업자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Tata telecommunication, Vodafone, Airtel, Aircel 등이 통신 관련 서비스 및 기기(소프트웨어 & 하드웨어)를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해당 제품은 법안으로 명시한 모든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사안마다 5억 루피의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이 부과된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고 이를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그러나 이외 단순히 통신 관련 기기(하드웨어)만을 판매하는 제조업체 및 벤더 등은 이 법안에서 명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통신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있을 경우, 거래하는 통신서비스사업자가 법안을 위반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관련 벤더 및 제조업체들은 정부의 업체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인도 내 사업에 불이익을 받거나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라이선스 취소 처리 또는 두 가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산(aid) 제품

인도 정부는 국내 전역에서 산을 이용한 테러 및 사람에 대한 위협과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판매되는 모든 산의 경로를 추적 및 통제할 수 있도록 The Poisons Possession and Sale Rules(2013) 법안을 제정하였다. 이로 인해 산을 판매, 구입, 취급하는 모든 기관 및 개인은 담당기관인 SDM(Sub Divisional Magistrates)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는 인도 전 지역에서 산을 구입하는 모든 내외국민에게 적용되며, 18세 이하에게는 산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그리고 우타르 프라데시 주의 경우 Meerut, Agra, Gonda, Kanpur, Bareilly 등의 도시 거리에서 산을 이용한 테러가 최근 다수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법안을 빠르게 수렴 및 가이드라인을 정립하여 발표하였다. 따라서 우타르 프라데시 주 내 모든 산 판매자들은 2주일 이내 SDM에 보유 물량과 판매점 주소, 등록된 번호를 신고해야 하며 라이선스가 없는 상점에서는 산 제품 판매가 금지된다. 교육기관, 연구소, 병원, 정부기관 등을 포함한 모든 기관 역시 산 관련 재고량과 사용용도 등의 세부사항을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산을 구입하는 사람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용 목적을 명확히 신고해야 한다. 산 판매자 역시 산 관련 거래 내역을 모두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하며 판매량, 판매된 산의 사용용도, 구매자 이름, 구매자 주소를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외 SDM에서는 이를 관리 감독하고 규정을 위반한 판매자에게 5만 루피(원화 약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토록 조치할 수 있다.

기타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상의 제한

인도 정부는 The Foreigners Act, 1946에 따라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연간 25,000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는 외국인에 한해서만 취업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연봉 총액에 따라 고용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외국인이 취업비자를 받아 인도에 입국한 후에도 유효기간 6개월 이상(180일 이상)의 고용비자를 신청할 경우 인도 도착 후 14일 이내에 복잡한 서류를 갖추어 현지 외국인등록사무소(FRRO/FRO, Foreigners Regional Registration Officers/Foreigners Registration Officers)에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이 지체될 경우 벌금(30달러)을 부과한다.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FRRO/FRO를 통해 최대 5년까지 비자 연장이 가능하나 기준이 모호하고 갖추어야 할 서류가 복잡하며, 연장 신청이 처리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터키

터키와 한국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이후로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양국간 교역이 활발해질수록 우리 무역수지의 흑자폭이 커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금년 5.1일 한-터 FTA 상품협정 발효 후 월별 수출입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바, 2013. 5~10월간 한국의 대터키 수출은 29.6억불로서 전년도 동기간 대비 36.2% 증가하고, 대터키 수입도 3.32억불로서 9.9% 증가하였다.

한-터 FTA 상품협정 발효 후, 한국의 대터키 ▲수출 급증 품목은 액정 디바이스, 합성수지 및 화학제품, 차량부속품, 승용차, 불도저, 철강, 선박 등이며, ▲수입 급증 품목은 석유제품, 의약품, 엔진부품, 가방류, 어육, 의류, 담배, 차량부품, 의료기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합성수지는 6.5% 관세 즉시 철폐로 경쟁력이 향상되어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며, 합성수지와 화학제품은 터키의 자력 공급이 어려운 부문으로 동 수출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제품도 국제적 차이가 낮지만, 대규모 거래로 인해 작은 관세 인하폭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가정용은 품목별로 호부진의 차이가 많아 관세인하 보다는 현지 시장수요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였으나, 가격 민감성이 큰 전자부품의 경우, 관세인하폭이 큰 평판디스플레이, 축전지 등은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터 FTA 상품협정 발효 후 6개월만의 자료로 전반적인 영향 분석은 어려움이 있으나, 중간재, 원료, 부품 등은 가격민감도가 높아 관세 철폐로 긍정적 영향을 보이며, 소비재의 경우 가격민감도가 높지 않아 연차적으로 관세 인하폭 증가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년 8월 한-터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이 재개되어 2014년 상반기중 타결을

목표로 추진중인 바, 동 협정 타결시 양국간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허가

외국인 투자 관련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는 노동허가 문제인데, 2003.2.27일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법”이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재무청과 문화관광부에서 취급하던 외국인 노동허가 업무가 2003.9월 노동부로 일원화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 재무청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비교적 수월하게 노동허가를 부여하였으나 노동부는 국내 노동시장 보호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규모, 사업실적, 납세실적, 터키 노동자 고용실적, 사회보장 보험 가입 여부 등 각종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노동허가 발급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노동허가 발급이 지연 또는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0.8.2일 노동허가법 시행령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외국인 1명의 노동허가 신청시 최소 5명의 터키인을 고용할 것으로 조건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터키인 5명 고용원칙’에 따른 노동허가 취득에 애로가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터키 정부는 2011.4.20일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①터키 당국이 시행하는 프로젝트 사업의 입찰을 탄 경우, ②터키인 전문가를 고용하기 힘든 첨단기술을 요하는 분야인 경우, ③외국인 직접투자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터키인 5인 고용원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부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투명하지 않고 갖추어야 할 서류가 복잡하여 현지 진출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비스 장벽

건설서

도로, 건물 등과 같은 단순한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터키 건설업체들이 맡고, 정유공장, 공항, 항만 등과 같이 기술력이 필요한 공사는 외국 건설업체들이 설계, 감독, 감리를 하고, 터키 건설업체들이 하청으로 참여, 노동력과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터키 건설업체들은 합의사항 외에도 추가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해당 터키 업체가 외국 업체와의 사업경험이 많고 신용도가 높은지 여부와 계약서 작성시 문제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규정 등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광서비스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터키 관광객(17,298명)에 비해, 터키의 한국 관광객(149,943명)이 10배 가까이 많으며 증가율 또한 4배 가까운 규모(6.6% 對 21.5%)로, 터키 내 한국인 관광가이드 수요가 많으며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터키에서는 터키 국적자만이 관광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업계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터키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관광가이드는 약 120여 명으로, 통역사 자격으로 관광가이드 자격증을 소지한 터키 국적자를 대동하여서만 가이드 활동이 가능해, 현지 비자발급, 노동허가 발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자 장벽

터키는 2003.6월 외국인 직접투자법(Law No. 4875)을 제정, 종전에는 회사 설립을 위해 재무청과 산업부로부터 받던 사전허가제(pre permit) 및 5만 달러 이상의 투자하한선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

을 개선한 바 있다. 외국인 투자는 거의 모든 분야에 개방되어 있으나, 금융, 석유, 에너지 등 주요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운용과 관련 지나친 관료행정, 불투명하고 자주 바뀌는 각종 지침,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중앙 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 미흡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기술규격승인(TSE)

터키의 경우 일부 자동차 부품 및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EU회원국 제품에 대해서는 CE 승인만 요구하나, 비EU 회원국 제품에 대해서는 CE 승인뿐만 아니라 터키 표준규격(TSE) 승인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세관 심사 시 아시아산 수입품은 Red Line⁵⁰을 적용하여 까다로운 심사를 실시하고, 서류 내용과 실제 물품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시 통관이 지연되어 바이어와의 납기 지연 등으로 인한 클레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⁵⁰ 터키 세관심사는 Red Line(물품검사), Yellow Line(서류검사), Blue Line(간단한 서류검사), Green Line(세관신고서 제출만으로 통관 완료) 등 4단계로 진행되는 데 Red Line이 가장 엄격한 등급이다.

러시아

한국과 러시아의 상품무역은 2009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12년 기준 225억 달러(우리나라 전체 상품 무역에서 2.1%를 차지)이다. 2012년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상품 수출입 규모는 각각 111억 달러와 114억 달러로 2.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은 기계류(62.2%)와 전기전자제품(14.4%)이며, 러시아로부터는 광산물(74.1%)과 철강금속제품(15.7%)의 수입이 중심을 이룬다.

양국간 투자관계를 보면,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는 2013.9월까지의 누적액(신고금액 기준)이 1.5억 달러로 미미하며, 제조업(66.2%) 및 유통(25.0%)이 주요 투자 업종이다.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OFDI는 2013.9월까지의 누적액(실투자금액 기준)이 20억 달러(우리나라 전체 O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9%)이며, 주요 투자 업종은 제조업(56.8%, 특히 식품제조업과 섬유·의류, 목재·가구 중심), 유통(14.3%), 광업(7.7%) 등이다.

2007~2008년 한국·러시아 BEP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그룹이 구성되었지만 이후 중단된 상태이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 화장품

화장품류에 대한 러시아의 까다로운 수입절차 및 등록서류 등으로 인해 국내 화장품업계의 대러시아 시장 진출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화장품을 러시아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기술 조정 및 도량기관(Rospotrebnadzor)이 발행하는 적합성 신고서(the Declaration of Conformity)가 필요하며, 유효기간은 최대 5년이다.

그리고 일부 제품의 경우 등록증명서가 필요하다. 즉, 향수 및 화장품의 안

전 기술규정에 따라 ①태닝을 위한 향수 및 화장품, ②미백, 문신용, 피부보호, 염색, 모발용, 위생, 아동용, 나노 향수 및 화장품, ③필링, 불소 함유 구강 위생용 제품(불소 0.15% 초과), 과산화수소 등을 포함한 치아미백 제품 등은 등록증명서가 필요하다. 등록증명서는 소비자 권리 및 건강 감독청(Rospotrebnadzor) 또는 위임을 받은 해당 공인센터에서 발행하고 있다.

호주

한국의 대호주 상품 무역은 2009년과 2012년에 일시적인 감소가 있었지만 2000년대 들어 지속적인 확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012년 양국간 상품 무역 규모는 322억 달러(우리나라 상품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이며, 대호주 수출입액은 각각 93억 달러와 230억 달러로 13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호주 주요 수출품목은 광산물(33.4%, 주로 석유제품)과 기계류(34.5%), 전기전자제품(11.9%)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광산물(78.8%, 주로 철광석 등 원료)과 농림수산물(12.3%)이다.

한·호주 투자관계를 보면, 호주의 대한국 투자액은 2013.9월까지의 누적액(신고금액 기준)이 21.9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IFDI에서 1.0%를 차지한다. 호주의 대한국 주요 투자업종은 음식·숙박(41.4%), 문화·오락(17.3%), 부동산·임대(16.7%) 등 서비스업 중심이며, 제조업에서는 운송기기(12.6%)에 대한 투자가 많다. 우리나라의 대호주 OFDI는 2013.9월까지의 누적액이 74.8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OFDI에서 3.2%를 차지하는데, 대호주 투자 중 78.0%가 광산업에 시행된 것이며, 그 외 유통(5.9%), 금융·보험(4.8%), 부동산·임대(4.3%) 등이 주요 투자업종이다.

한·호주 양국간 FTA는 2013.12월 실질적으로 타결되었고, 2015.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그 외에 양국은 RCEP 협상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 태양광패널

2013.1월 현재 수력 및 풍력에 의한 호주의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량은 전체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전력량의 12.1%에 달한다. 호주 정부는 이 비율을 2020년까지 20%로 높일 계획이어서 향후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호주 시장에서 Trina, Renesola, Suntech, Canadian, China Sunergy 등 중국의 5대 메이커에 의한 태양광 패널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인버터를 비롯한 각종 부품의 중국산 사용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산 저질 부품 수입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설치 업체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자각과 그 동안 규정의 사각지대에 있던 주요 부품에 대한 안전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가정용 및 상업용 태양광 패널 설치와 관련하여 주요부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 규정 강화안을 Standards Australia를 통하여 예고하였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 의료기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호주 정부부서인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산하의 호주의 약품관리국(TGA: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의 승인을 필히 받아야 한다. 즉, 의료기기 판매의 경우 호주측 파트너가, 의료기기 수출의 경우 현지회사 및 에이전트가 등록해야 한다. 이때 TGA의 ARTG에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외 제조 또는 수출업체가 직접 하지 못하고, 호주에 직접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Australian registered company or business)를 지정(스폰서)하여 대신 진행해야 한다.

한편 선적 및 통관 시 TGA 승인 여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호주에서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TGA 승인 또는 ARTG 등록 여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해외업체가 제품에 대한 CE 인증이 있으면 별도의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CE 인증이 있는 경우 ARTG 등록절차는 매우 간소해질 수 있다. 그러나 CE 인증이 없는 경우 TGA를 통해 순응평가인증서(Conformity Assessment Certificate)를 신청하여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